

21세기 제주 고령사회 전망과 대응방안 모색

- ▶ 일 시 : 2007년 5월 11일(금) 오후 2시
- ▶ 장 소 : 제주 KAL호텔 2층 그랜드볼룸

주 최· 주 관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21세기 제주 고령사회 전망과 대응방안 모색

- ▶ 일 시 : 2007년 5월 11일(금) 오후 2시
- ▶ 장 소 : 제주 KAL호텔 2층 세미나실

『 진행 순서 』

- 등 록 : 13:30 ~ 14:00
- 개 회 식 : 14:00 ~ 14:20
 - ☞ 개회사 및 격려사
- 기조강연 : 14:20 ~ 15:00
 - ☞ 고령사회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 : 장수문화의 발전과 과제
- 제 1주제 발표 및 토론 : 15:10 ~ 16:10
 - ☞ 제주지역 고령사회의 현황과 향후 대응전략
- 제 2주제 발표 및 토론 : 16:20 ~ 17:20
 - ☞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
- 종합토론 : 17:30 ~ 18:30
 - ☞ 21세기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방안 모색
- 폐 회 : 18:30

【 목 차 】

기조강연

// “고령사회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 : 장수문화의 발전과 과제”

제 1 주제
발표 및 토론

// “제주지역 고령사회의 현황과 향후 대응전략”

제 2 주제
발표 및 토론

//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

종합토론

// “21세기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방안 모색”

개 회 사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도지사님과 귀빈 여러분, 그리고 발표자 및 토론자·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사회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2000년도를 기점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가 경제생활, 노동활동, 취업, 부양, 금융, 연금제도, 여가 문화 등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구를 두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는 제주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다른 타시·도 지역에 비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80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고령화 현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주지역은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아 역사적으로 「장수의 섬」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따라서 제주가 고령사회에서 장수

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이를 관광, 휴양, 의료 및 실버산업 등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욱 새롭게 발전할 잠재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은 2003년 4월에 연구원내에 「제주장수문화 연구센터」를 개설하여 제주사회의 노인복지, 장수요인, 장수브랜드개발, 장수상품개발 기초조사 등과 같은 연구과제들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1세기 고령사회의 도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세미나는 제주지역의 고령화 현상의 현주소 및 대응전략을 재조망하고, 아울러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21세기 제주 고령사회의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진지한 토론의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와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오늘 세미나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직접 참여하여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5월 11일

제주발전연구원장 고 부 언

격려사

‘계절의 여왕’으로 불릴 만큼, 1년 열두 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 있어서, 5월은 더 복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 좋은 시기에, 도내 석학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21세기 제주고령사회 전망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됨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귀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과, 주제발표, 토론, 진행을 맡아주신 분들, 또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경제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1998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앞으로 10년 후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극복해내느냐에 의해 미래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령, 두 사람이 똑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바다를 본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은 두려운 마음부터 느끼는 경우가 있을 테고, 또 한 사람은 희망봉을 찾아서 도전해 보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주고령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에 살면 건강하고 장수 할 수 있다는 장수의 섬 전략보다 더 큰 관광전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제주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장수의 섬 전략과 함께 나아간다면 충분히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도의 복지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장수의 섬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일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사회를 어떻게 맞이해 나가야할 지에 대한 이정표를 세우는 알찬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회는 위대한 주민들이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세미나를 개최하시는 여러분의 의로운 활동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5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 기 조 강 연 ◆

고령사회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 :
장수문화의 발전과 과제

발 표 : 박 상 철

(서울대학교 교수 · 노화고령사회연구소장)

당당한 노화: 장수사회 대비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역할 (Confident Aging: Individual Achievement and Sociocultural Influence in Longlive Society)

I. 들어가는 글

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장수(長壽)라는 개념에 대하여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류가 현재와 같은 고령사회를 겪어 보지 않았으며 또한 백세인과 같은 초고령자의 숫자가 이렇게 많고, 그들이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일찍이 경험하여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수(長壽)라는 용어를 단순한 연령적,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보다 사회적 측면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계층의 출현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생활문화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새롭게 도출되는 장수문화란 종래의 연령적 특수계층인 고령자중심의 노인문화(老人文化)라는 개념이 아니고, 연령을 초월하여 고령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인 인간들이 남녀노소 모두 함께 어우러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관념 및 규범체계라고 정의해 본다(박상철 2003).

장수문화는 사회 구성원 누구나 함께 건강장수를 추구하며,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능동적 생활을 영위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고령자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화현상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고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하여 고령사회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새로운 바탕에서 강구해 보고자 한다.

II. 고령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1) 현실의 문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0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구는 4727만8952명으로, 2000년에 비해 2.5% 증가하였고, 인구밀도는 474명으로 5명 증가하였다. 성별 분포에서는 남성 2362만 명, 여성 2365만 명으로, 여성이 3만 명 더 많고, 특히 50세 이상에서 여성의 숫자가 많았다.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 연령은 35.0세로, 2000년에 비해 3세가 많아져 고령화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436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우리 인구의 청장년 비중은 아직 71.6%에 이르지만 점차 감소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자가 증가하는 반면, 여성의 취업률 증가, 만혼화 등으로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저하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 패턴은 국민 평균수명의 급증을 가져오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가속시켜 급박한 사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 고령화는 여러 관점에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복지적으로는 국민연금의 고갈 우려가 크게 대두하여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위기를 걱정하고, 일반 노동의 측면에서는 기초 노동력의 부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이민자 유입제도 정비가 강구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독거노인의 급증과 특히 여성노인의 증가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는 세금납부자의 감소와 세금 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가 세수의 변화가 초래될 것이며, 국방의 측면에서도 국방자원의 부족이 문제가 될 것이다. 기업에서도 인력 확보를 위한 정년 개념의 재정립과 임금 피크제 또는 호봉제의 폐지와 직무제의 개발과 같은 새로운 경영기법의 대두가 필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국민연금, 세금정책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충격에 대비하는 고령화 정책의 수립은 이 시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2) 인식의 문제: 문화적 충격이 매우 크다.

종래 노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평균수명이 30~40대였던 시절 60대 이상의 노인이란 사회적으로 회소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충분한 부양 잠재율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회적으로 생산적 주체일 필요가 없었다. 시대와 문화적으로 차이는 있었겠지만, 노인은 존경과 우대의 대상이었고 경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령층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고령인의 회소성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경제적 피부양자로서의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노인층은 과거의 노인에게 제공되었던 효를 바탕으로 한 공경은 기대할 수도 없게 되어, 이로 인한 문화적 심리적 충격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충격은 단순히 고령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를 상대하여야 하는 청장년층에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인 장유유서 또는 효사상에 의한 노인공경의 문화가 변화되면서 가족은 물론 일반 사회에서의 노소간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아직 강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회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문화의 정립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박상철 2001).

3) 실천의 문제: 고령화 대책은 수혜복지 우선주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위하여 정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조치들이 이미 추진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입법 조치 사항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법으로는 생활보호법, 생활안정지원법,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통하여 노인의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 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취약계층노인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경제와 산업, 고령 친화적 사업의 육성 등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통하여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령자 고용정보은행, 고령자 인재은행과 함께, 사업주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 이행계획 수립 등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는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농촌지역마을 종합정비사업, 농촌관광마을조성사업 등을 장려하며,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 (노후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연금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노인요양보험제도/공무원연금 등 특수지역연금/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재농어민 국민연금 도입할 때 농특세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민 건강보험료 정부 지원을 50%까지 확대 하며 2003년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농촌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도입되고, 여성 농업인 노인 복지 강화사업이 개발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노인보건을 포함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암 관리, 만성질환관리, 전염병관리, 정신보건 등을 지원하고 있다(박상철 2006).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은 기본적으로 고령자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 정책으로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여성, 저소득층 등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인 점은 고령사회 대비 국가정책의 기초가 고령자를 장애자 유약자와 동일 범주에 포함하여 고령자 층을 복지수혜의 대상으로서만 인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장수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저 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강구되고 있고, 산자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한 고령친화산업육성이 거론되고 있으면서도 이들을 체계화하는 시스템은 아직 없다.

즉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자와 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령인 층을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4) 존엄성의 문제: 삶의 질과 행복지수는 고령사회의 핵심이다.

삶의 질 개념은 건강을 단순한 신체적 건강을 넘어서 좀 더 포괄적인 개

념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계량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삶의 질 지표가 가지는 주요한 특징은 안전, 건강, 환경, 보람, 정신적 만족감 등 비화폐적 요소를 중시하고, 자산, 소득, 사회 환경, 사회 간접자본, 안전 등 축적된 자산(stock), 재화의 질, 배분을 고려한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사회지표체계가 포괄하고 있는 영역은 대체로 건강, 안전, 환경, 교육, 여가, 주거 등임을 알 수 있다(Falloeifield 1990).

삶의 질 문제가 고령사회를 맞아 새롭게 대두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구의 고령화와 사망 및 이환 양상의 변화, 그리고 생활양식의 변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 생물, 물리, 화학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환경오염, 안전사고, 재해 등으로 인한 비용이 증대되고, 교통문제 교통사고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정보화, 탈산업화, 네트워크형 기업으로의 전환, 개별국가경제에서 지구촌 경제화로의 전환 등 사회경제적 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의 윤리 및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박상철 1998).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서 욕구 기대치가 크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NIH 1990).

삶의 만족도와 GDP의 상관관계 조사를 보면 부국들의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가나 등의 최빈국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국가의 경제 상태와는 상관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GDP 규모는 최근 수 십 년간 크게 증가했으나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소득, 평균수명, 에너지 소비, 환경 훼손, 문화 전통의 자긍도 행복의 지표로 비교하여 본 결과 178개 국가 중에서 덴마크가 1위, 스위스가 2위, 오스트리아 3위를 차지하는 등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으며. 미국은 23위, 한국은 102위에 그쳤고 최하위 178위는 콩고 민주공화국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경향신문과 아름다운재단이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행복지수와 나눔의 효과를 조사해 본 결과 흥미롭게도 기부나 자원봉사 등 나눔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은 자신의 재정적 사회적 상태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누어주는 행위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삶의 질과 행복지수라는 개념으로 판정하였을 때 단순한 경제적 수준만이 아닌 또는 건강상의 수준만이 아닌 환경 안전은 물론 구성원의 사회관계와 문화적 배경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에 직접 참여 공여할 수 있는 정도가 주관적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 일반 고령자의 경우는 기본적인 건강 재정상의 문제점도 크지만, 퇴직 또는 문화적 단절에 따른 사회적 고립에 의한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고령자의 경우 청장년층에 비하여 삶의 질이 크게 훼손되고 행복지수가 낮을 것은 당연하게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여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 유지라는 새로운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Ⅲ. 노화 이론 비판

1) 노화 이론의 배경: 노화의 4원칙

노화라는 기본적인 생명현상은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개체적 수준에서 가지적으로 보이는 기능적 저하와 형태적 변화에 의한 판별은 용이하나, 이를 보다 세포수준 또는 분자수준에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노화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학설들은 백화난만하여 300여 가지 넘는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학설도 정설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설들이 노화현상의 부분적 측면에 대하여 설명하는 양상설 (Aspect theory)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화학설들에는 노화현상에 대하여 유전자· 세포· 조직· 개체의 각각 다른 수준에서 설명하거나, 노화 생명체의 기능적 측면이나 형태적 측면에 국한하여 설명하기도 하고, 생물체의 종(種)에 따른 차이를 강조하는 등 제한적이어서 노화현상 전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의가 미비한 형편이다.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결정론적 지견과 환경적 요인들에 의한 누적적 손

상효과에 의한 지견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으나, 이러한 고정된 개념으로는 노화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기에 크게 부족하다(박상철 2004).

여러 복잡한 가설들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일반적인 노화현상은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Strehler는 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1982). 첫째, 노화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보편적(universality)으로 초래되는 현상이며, 둘째, 노화란 생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progressiveness) 변화이며, 셋째, 노화란 생체 고유의 내재적(intrinsicity) 변화에 따라 초래되는 현상이며, 넷째, 노화에 따른 변화는 대부분 기능 저하(deterioration)를 동반하는 형태적 변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Strehler의 정의는 이후 노화의 네 원칙(4 Principle)으로 널리 통용되었으며, 학계에서 수용해 온 노화에 대한 기본 이론의 배경이 되었다. Strehler의 4 principle은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누구나(ubiquity), 어쩔 수 없이(inevitability),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ility) 기능저하와 형태변화가 동반된(alteration) 변화임을 강조하고 있다(Park 2006).

이러한 개념에 따라 노화 현상은 필연성과 비가역성을 바탕으로 하는 결정론적인 시각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노화의 고식적 개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 한 노화에 대한 대응 방안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Strehler의 기본 가설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분석 비판해 보는 것도 의의가 클 것으로 본다.

2) 명제 1 검정: 늙으면 죽는다.

노화가 거론되면 무엇보다도 죽음과의 관계를 연상하게 된다. 노화는 숙명적인 과정에 따라 죽음에 이르는 전 단계로 인식되었고, 그 결과 노화동물·노화세포는 외부 독성 자극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젊은 동물이나 세포보다 손상을 많이 받고 쉽게 죽게 될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늙으면 죽는다”라는 명제를 검정해 보고자한다. 우선 이 명제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은 시간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생명체 존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시간성인데 이러한 개념이 배제된 것은 문제이다. 그래

서 이 명제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본다. “노화 세포 또는 개체가 젊은 세포 또는 개체보다 더 잘 죽는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험관내 및 동물실험을 수행하였다. 인체유래 섬유아세포를 계대 배양하면 세포노화가 초래된다. 이들 세포에 자외선이나 강한 화학물질을 투여하면 젊은 세포들은 쉽게 세포사멸이 유도되는데 반하여, 노화세포는 강한 저항능을 나타내고 있음이 관찰되었다(Yeo et al, 2002). 이러한 현상은 세포 수준 뿐 아니라 개체수준에서 비교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젊은 동물과 늙은 동물을 대상으로 DNA 손상유도물질을 복강에 투여한 다음 조직에서의 세포사멸유도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젊은 동물에서는 세포사멸이 왕성하게 유도된 반면 늙은 동물에서는 세포사멸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Suh et al 2002).

이러한 현상은 노화세포나 개체가 외부 자극에 대하여 젊은 세포나 개체들보다 오히려 강한 저항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노화현상의 생물학적 의의가 숙명적인 과정에 의한 죽음의 전 단계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생존을 위한 환경에 대한 적응적 변화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화 현상이 환경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한 적응적 변화(adaptive nature)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Yeo & Park 2002).

노화 현상은 생명체가 외적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고 적응함으로써 생존하기 위하여 변화되는 자기 보호적 변화이지, 불가피하게 숙명적으로 정하여진 변화가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물학적 새로운 발견들을 통하여 노화에 대한 근원적인 부정적 퇴행적 시각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늙으면 죽는다는 또는 죽어야한다는 명제를 생명체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오히려 살아 남기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노화현상이 초래됨을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제기한 명제인 “늙으면 죽는다” 라는 결정론적 시각은 “노화현상의 본질은 생명체의 살아남기 위한 적응의 결과이다” 라는 적응론적 시각으로 바뀌어야한다.

3) 명제 2 검증: 노화에 따른 변화는 비가역적이고 불가피하다.

노화세포는 세포사멸유도에 대한 저항성과 더불어 성장인자에 대한 반응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세포가 늙어지면 성장인자를 처리하여도 세포증식이 유도되지 않는다는 특성은 노화현상의 비가역성(非可逆性, irreversibility)을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노화세포의 기능저하, 특히 성장인자 반응저하 요인으로 새로운 지견이 제안되었다. 세포막에 위치하는 카베올라(caveolae) 구조의 주성분인 카베올린이 노화에 따라 증가됨으로써, 이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각종 신호수용체의 기능을 제어하여 전반적인 신호전달능력 저하가 초래되며(Park et al 2000), 또한 세포막 수용체 의존성 엔도사이토시스의 또 다른 주역인 클라트린 시스템에서는 암피피신(amphiphysin)이라는 인자가 노화에 따라 소실됨에 따라 성장인자들에 의한 세포내 신호전달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함이 발견되었다(Park et al 2001).

이를 바탕으로 노화세포의 카베올린 저하를 유도하거나 암피피신을 주입하여 보충하여 주었을 때, 노화세포의 기능이 회복되고 형태적 변형도 수복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Cho et al 2003). 이러한 연구 성과는 그 동안 노화세포의 성장인자 반응저하가 비가역적인 불가피한 보편적 현상(irreversible inevitable universal phenotype)으로 인식되어 왔던 개념을 바꾸어야 함을 가리키고 있다(Cho & Park 2005). 이와 같은 노화세포 기능저하의 수복 가능성은 세포의 노화가 환경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생존수단으로 유도되었다는 시각에서 더욱 나아가 노화세포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능동적 증식 또는 기능회복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Park, 2002). 이러한 생명체의 생태는 단순한 생존전략(survival strategy)을 위한 노화현상이 아니라, 노화세포도 번영(thrive)을 추구할 수 있는 당당한 변화가 유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실험실적 연구 뿐 아니라 인간의 노화종적관찰연구를 통하여서도 분명해지고 있다. 즉 인간의 연령증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생리기능이 저하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별로 차이가 현저하며 개인별로 노력에 따라 기능이 회복되는 예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 점은 노화에 대한

결정론적인 시각을 벗어나 각 개체의 능동적인 대처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박상철 2002). 따라서 두 번째 명제는 수정되어 “노화에 따른 기능저하 및 형태변화는 비가역적이거나 불가피하지 않다” 라고 표현이 바뀌어야 한다.

4) 명제 3 검토: 노화 현상은 보편적이다.

일견하면 노화현상이 보편적인 생명현상인 듯하나, 이 명제도 시간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면 개인별 차이가 심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노화 종적관찰 연구를 통하여 보았을 때, 노화의 정도가 개인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만 각 개개인 내에서도 장기별로 노화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은 노화현상의 결정론적 보편성에 큰 의문을 제기해주고 있다. 실제로 백세인으로 대표되는 초장수인들을 면담 조사하여 보면 이러한 인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노화 종적관찰연구에서 예견되는 연령증가에 따른 형태 변화, 기능저하의 패턴이 초장수인들에게서는 전연 다르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백세인의 건강상태를 볼 때 일반적인 노인들의 추세와는 달리 매우 건강한 패턴을 보이며, 백세인의 숫자도 지역적으로 또는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박상철 등. 2005). 예를 들면 호남 및 제주 지역은 여성 장수도가 높고, 영동 및 영남북부 지방은 남성 장수도가 높다는 사실은 환경과 문화의 차이가 장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장수에 따른 신체적 생리적 기능의 변화를 비교하여 보면 여성은 지속적으로 연령증가에 따라 신체, 생리 기능이 저하 감소되는 패턴이 분명하나 남성의 경우에는 크게 변화되지 않는 양상을 보여주어 문화적 일상 생활패턴의 차이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시 한 번 노화현상의 적응적 특성을 강조해 주고 있으며 노화의 보편적 원리보다 차별적 특성이 매우 강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성에는 문화적 환경과 생태적 환경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세 번째 명제인 “노화는 보편적이다” 라는 개념을 “노화는 차별성이 강하다” 라는 개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5) 노화와 장수의 요인: 개체성과 사회 환경성의 상호작용

장수인자를 밝히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해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 당사자의 개체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주로 장수의 유전적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수많은 유전자들과 그 유전자의 다형성이 거론되었으며 아직도 엄청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일부 의미 있는 유전자들이 발견되기도 하였지만 그 결과만으로는 개인의 장수에 대하여 설명하기가 어렵다. 장수인들의 생활패턴과 식생활이라든가, 심리 성격적 차이들과 같이 장수인의 개체적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병행하여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수 요인으로서의 공통적인 특성을 도출하기는 더욱 어렵다.

장수인들의 개체적 특성과 더불어 장수인들이 살아온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 의한 장수도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의 장수도는 시대 발전에 따라 크게 향상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도에 평균 수명이 52세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77세에 이르러 반세기도 못되어 국민의 수명이 25세나 증가되었다는 사실은 사회문화적 발전이라는 요인이 인간의 장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수도 증가 추이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국내의 경우 해안지방과 산간지방의 장수도가 남녀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들의 삶의 패턴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은 지역의 지리 생태적 요인, 문화 환경적 요인 등이 장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박상철 2002, 박 등 2005).

즉 인간의 노화와 장수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이나 생활패턴의 차이로 대표되는 개체성(Private mechanism)과 사회문화적 요인과 지역생태적 특성으로 대표되는 공공성(Public mechanism)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6) 노화 개념 인식전환

(1) 노화의 새로운 개념과 인식 전환

노화현상은 세포의 계대에 따라 또는 연령증가에 따라 나타나지만, 이러한 시간적 요인만이 아니고 공간적 요인인 물리학적·화학적·생물학적 자극에 의하여서도 손쉽게 유도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자극에 의하여 유도되는 이러한 노화현상은 스트레스유도 노화촉진현상 (Stress-induced premature senescence) 이라고 구별되기도 하나, 적어도 외견상 이러한 노화현상은 본질적인 생체 고유의 노화현상과 큰 차이가 없다. 노화현상이 시간적 인자만이 아니고 공간적 인자에 의하여서도 유도될 수 있다는 사실은 노화가 시간적 결정 요인만이 아니라 공간적 요인인 환경적 또는 생태적 요소에 의하여 영향 받을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서든지 노화현상이 유도된 경우 초래되는 여러 가지 분자적 변화현상을 gene chip이나 proteomics 등의 최신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노화 유도에 따라 세포내의 대사계, 신호전달계, 스트레스 반응계를 비롯한 여러 반응 시스템과 더불어 형태를 조율하는 세포골격 구조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반드시 노화에 의하여서만 유도된다고 국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의하여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보편적 반응성 시스템의 산물이다. 더욱 이러한 반응성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가변적이고 적응적인 생체장치들이기 때문에 노화현상이란 시간경과에 따른 생체의 숙명적 변화라기보다는 시공간적 외적 요인에 따른 반응적 적응현상의 일환임이 분명해지고 있으므로 노화현상이란 생명체의 생존을 위한 기본 현상의 일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노화현상을 세포가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가변적으로 그리고 적응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초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노화에 따라 세포내에 초래되는 다양한 변화 양상을 총괄하여 노화장(老化場, aging field)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세포막내에서 이루어지는 노화장의 변화는 세포를 외적자극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응해가는 과정이며, 환경요건의 변동에 따라 순응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안해주고 있다. 이러한 추론은 세포나 생명체의 노화에 주변의 기질의 영향 그리고 환경의 조건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종래 노화학설

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노화 현상의 종간의 차이, 개체 간의 차이 및 개체 내에서의 장거나 조직 간의 노화속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노화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가설인 노화대문설(老化大門說, Gate theory of aging)이 제안되었다(Yeo & Park 2002).

생물학적 연구 성과는 노화라는 개념을 본질적으로 재고할 때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Strehler가 정의한대로 노화현상이 비가역적이고 불가피하고 보편적이며 기능저하를 동반한 변화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앞에서 제 1 명제, 제 2 명제, 제 3 명제로 나누어 논술한 바와 같이 Strehler가 가정한 모든 명제들은 보편 타당적 진리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적인 양상적 측면에서의 이론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세포수준에서는 노화현상이 수복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안되었고, 노화현상이 부득이한 프로그램에 의한 불가피한 반응이 아니라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수단으로 이해됨에 따라 새로운 진정한 노화 제어의 방법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노화란 개념은 우선 종래의 제한된 계대에 의한 시간적 종속 개념으로서의 노화가 아니라, 보다 시공간적으로 확대된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기능적으로 비가역적 불가피한 변화가 아닌 능동적, 가역적 변화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화현상이 종래의 수동적, 비생산적, 비효율적, 자포자기적 상황에서 이제는 능동적, 생산적, 효율적, 자기 선택적인 변화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고령인의 경우도 단순히 연령의 증가라는 이유로 개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리라는 통념을 배제하고, 얼마든지 인위적 노력에 의하여 생체기능 유지가 가능함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기능적 장수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2) 노화에 대한 대응 방안은 운명이 아닌 선택이다.

노화에 대한 비가역적 결정론적 시각에서 볼 때, 노화현상이 불가피하고 비가역적이며 이미 기능적 형태적으로 변질되고 저하되었다면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이미 변화된 유전자, 세포, 조직, 장기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

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응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노화에 대한 대응 방법은 이와 같은 바꾸기 원칙(Replace Principle)에 준하여 추구되었다.

실제로 항노화 요법이라는 미명하에 임상적으로 유전자요법, 줄기세포요법, 조직팻치 이용, 인공장기 또는 장기이식법 등이 개발되어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들은 방법론적으로도 아직 온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바로 이러한 철학 하에서 사람이 늙어지면 더 이상 효율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을 것으로 가정하여 정년퇴직, 또는 은퇴, 퇴출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악용해오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결정론적 사고개념을 벗어나 노화 현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노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전연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노화현상이 생존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적응적 반응적 대응의 결과로 초래되는 현상이며 기능적 측면에서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규명되면서, 노화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서 바꾸기가 아닌 고치기 원칙(Restore Principle)이 새롭게 제안되었다(Park 2006).

노화된 세포나 조직 또는 장기를 무조건 바꾸어 치는 방법이 아니고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노화현상을 새롭게 이해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령화 현상에 의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도 고령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본질적으로 개선하여 새롭게 함으로써 반드시 바꾸기 원칙에 의한 퇴출이 아니라 고치기 원칙에 따라 새로운 참여와 봉사를 통한 보다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시점이다.

IV. “당당한 노화”의 개념 정립

1) 당당한 노화(Confident Aging)의 개념 정의

장수문화를 고령자들이 베풀면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라고 이해한

다면, 무엇보다도 고령자들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봉사적, 재정적, 감성적 자기능력의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수 있는 아량, 가지고 있는 것은 나누어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장수인의 덕목이 아닐까?

지역사회는 이러한 고령자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크다. 고령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사회봉사 프로그램, 생산적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들도 활발하게 개발하여 현실적으로 가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방안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은 당당한 노인의 위상이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사회가 필요한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고, 그동안 쌓아 두었던 경륜이나 지식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고령인의 모습이 당당한 노화(confident aging) 방안의 목표이다.

이러한 당당한 노화의 본질은 기존에 거론되어왔던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하면서도 고령자의 위상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에서 차별화된다.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가 결과적 가치에 보다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면,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는 경제적 가치에 보다 중점을 두고 노화과정을 평가 한다고 보겠다.

그러나 당당한 노화(Confident Aging)는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평가 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옛날에 무엇을 했던,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큰 것이던 작은 것이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이웃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노화 패턴을 당당한 노화라고 정의 한다.

이러한 당당한 노화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문제로서는 새로운 개념의 장수문화가 필요하고 이를 계기로 고령자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실천의 문제로서는 지역사회가 이에 대응하여 대비하는 일도 필요하며, 장수문화의 제반 사안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고령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정립되어야 함은 당위의 목표이다.

2) 장수문화의 도입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인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 동시에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령자들이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며 의존적인 계층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자립적이며 사회기여계층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태반의 고령층은 과거의 고전적 산업체계에 젖어 있고, 급변하는 자동화 전자시스템과 인터넷에 의한 국제적 동시 체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충격을 받고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제도권에서 축출되는 위기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고령자 계층 개개인의 적극적 참여의지이다. 스스로 참여하여 사회적 생산주체로서의 책임의식을 회복한다는 것은 고령층의 권익에 앞선 전제 충분조건이다. 따라서 장수문화의 본질적 목표는 고령자 층이 스스로 노력을 통하여 생산적 능력을 회복하여 생산적 노화사회를 건설함에 있고, 이러한 자기발전을 통하여 사회적 주체로서의 자긍심 (self-esteem)을 회복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단순히 늙었다는 이유로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함에 있다(박상철 2003). 살아 있다는 것은 변화이고 도전이다. 늙었다는 것은 삶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백세인으로 대표되는 장수인들의 삶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도출해 본다(박상철 2002). 첫째, 장수인 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아무리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었어도 이들은 예나 다름없이 항상 움직이면서 텃밭을 가꾸거나 산에 가서 나무를 하거나 작업장에서 삼태기를 짜거나 하는 일상의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장수인의 제1 특성으로 이와 같은 생동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장수인 들은 항상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이가 들어 동년배 친구가 없어도 이삼십년 어린 이웃들과의 어울림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 또는 독거노인의

경우 동네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장수인들의 제 2의 특성으로 연계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백세가 넘었으면서도 항상 자신이 하여야 할 일,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하여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수인들의 제 3의 특성으로 독립성을 들었다.

넷째, 또한 백세인 들에게 노래와 춤을 요청하면 이 분들이 흥에 겨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뜨거운 감성을 가지고 있음을 본다. 따라서 장수인의 제 4의 특성으로 감동성을 들었다. 다섯째, 백세 장수인 들의 삶에 있어서 특징적인 점은 생활의 규칙성과 절제성이다. 항상 일정한 패턴의 삶을 규칙적으로 살아온 이 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자연의 규칙성과 순환성을 읽을 수 있다.

장수인들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다리, 항상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팔, 항상 주변의 상황에 판단 대응하는 머리, 항상 자신의 마음을 발산할 수 있는 감성을 가진 피부, 항상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심장을 볼 수 있다. 변함없이 항상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는 백세장수인의 모습은 노화와 장수의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의 진지함과 거룩함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은 전신적인 대응과 행동을 통하여 이웃과 함께 더불어 마음에서 우리나라 삶을 살아가는 장수인의 특성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삶을 확대 발전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장수문화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다.

3) 고령자의 의식 변화

고령자층이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과거체계에 의한 사회적 굴레에서 탈퇴하여 어떻게 하면 새로운 질서에 의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가이다. 이러한 태도변화의 기본조건은 하루라도 빨리 고령자로서 받아왔던 문화를 반대로 베풀어 나누어주는 문화로 전환하는 것이다. 노인이라는 명분에 의한 사회적 봉양체계에 대한 기대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 던지고, 여전히 사회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장수문화의 핵심은 고령자가 받는 생활이 아닌 주는 생활,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이웃과의 관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데 있다(박상철 2003).

첫째, 고령자 스스로가 자신이 살아 있다는, 그리고 살 수 있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산다는 것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생물학적 당위이다. 늙었다는 이유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고령자들도 주변의 변화를 감당하여야 한다. 자신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는데 망설이지 않아야 하며, 변화된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노화라는 생물학적 현상이 죽음에 이르는 전 단계 과정이 아니라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단계이며, 죽음에 대한 저항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에게 의타심은 금물(禁物)이다. 고령자들은 스스로 신체적 어려움을 견디어 내어야 하고, 대외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질환이 많아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신체적 부자유가 커졌을지라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의타심을 배제하여야 한다. 특히 생체 내 조직들은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고 퇴행해 버리는 생명체의 신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다 활발하게 신체를 적극적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셋째, 고령자들은 창조적 활동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세계적 문호, 작곡가, 예술가, 과학자들이 팔구십이 넘어서도 젊은이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욱더 왕성한 창조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집안에서도 고령자들을 가족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부자·고부간의 갈등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의견이 다른 것은 사고의 바탕이 다르기 때문이며, 서로 조화하려는 노력이 바로 장수의 첩경이다.

넷째, 고령자들은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고령자들을 오로지 연령이라는 조건에 의하여 일괄해서 사회적으로 차단하고 차별화를 시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고령자들 스스로 강한 의지에 의한 사회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웃과의 관계망을 강화하여야 한다. 남과의 어울림에는 받기만해서는 안 된다. 줄 수있어야하고 서로 배려하여야 한다. 그 동안 살아온 나날도 많았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음을 간과시해서는 안 된다.

4) 장수사회의 조건

과거 인종분류과정에서 흑백분리로 인한 흑인의 비극적 삶이나, 남녀의 사회적 신분상의 차이에 의한 남녀분리·여성사회 참여 제한 등의 역사적 사실과 비교하여 볼 때, 노인과 젊은이를 차별화하는 현실은 인종분리나 남녀 차별과 다르지 않은 유사한 유형의 시대적 사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 볼 때,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회적 충격인 고령인구의 급증은 연령차별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연령차별의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인 정년 제도를 혁파하기 시작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여러 전문 분야에서 오히려 정년을 낮추는 시대적 역행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 IMF라는 국가경제의 대 혼란기를 거치면서 종래의 전통적 사회규범체제가 무너지고 오로지 효율과 경제성이라는 척도에 의한 기준이 사회에 널리 과급되면서 급속도로 우리사회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고령사회는 고령자들 스스로가 자립하여 당당하게 삶을 영위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장수사회(Long Live Society)라는 새로운 개념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장수사회라는 개념은 고령사회라는 개념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대비되는 개념이다.

첫째, 구성원들이 연령에 따라 계층화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라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져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화로운 사회이다. 나이가 든 사람들도 반드시 어떠한 사회적 몫을 수행하도록 유도해 주는 사회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여야 한다는 점은 있을 수 없다. 이제는 사회의 제반 시스템에 나이든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들이 대접받고 남에게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는 사회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 관점에서 고령자를 공경하여야 한다는 문화가 있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숫자적으로 고령자가 급증하였지만 이들은 대부분 건강하고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결코 젊은이들 못지않을 만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기대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회만 제공되면 고령인 들이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음은 분명하다.

셋째, 고령자들을 사회적 시스템에서의 주도적 참여를 제한하고 피동적인 보호대상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고령인 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사회 건설과 보존에 앞장 설수 있도록 하여야만 장수사회는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고령인 들에게 생동감 있는 일거리를 부여해 주었을 때 더욱 보람 있는 삶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강원도 양구군의 어느 노인 회관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스물다섯분이 모여 단순히 놀거나 흐지부지 소일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용 가구 농기구 등의 소품을 제작 판매하여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그 수익으로 매년 2회 이상 해외여행까지 즐긴다는 사실은 고령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화가 정착할 필요가 시급하다. 이러한 문화는 고령자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건설하고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장수 사회가 발전될 수가 있다(박상철 2003).

5) 장수문화와 인간의 존엄성

장수문화에서 추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목표는 연령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실천방안들이다. 고령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령인의 사회적 역할을 부각하여, 고령사회 복지를 확립하여 고령인들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이 인정되고, 건강한 삶을 통하여 사회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체계의 확립이 장수문화의 실천방안이다. 연령적 구분에 의한 노화 또는 고령화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고, 오로지 개개인의 의지적 노력에 의한 삶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연령에 상관없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이다. 나눔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망을 확대 발전시켜 사회참여와 봉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도 하여야겠지만, 고령인들 스스로도 개개인의 노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6) 장수문화의 과학적 근거

장수문화의 구체적 프로그램에는 개인을 위한 의식주, 건강, 취미활동, 기호 등이 포함되고, 사회적으로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측면의 제도와 관습이 대상이 될 것이며, 환경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자연조건은 물론 생활공간 및 공동시설, 기구 등의 인위적 조건 등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수와 관련하여서는 너무도 많은 사이버 정보가 만연하고, 특히 의학과 관련하여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부적정한 의술들이 사회 전반에 과급되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과기처 1996, 박상철 1997).

그러기 때문에 장수문화는 인간중심 과학을 토대로 하여 정립되어야 한다. 인간중심 과학기술은 보다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한 실천적 과학이어야 하며, 공익성이 강조되는 공공을 위한 과학이어야 하고, 과거의 학제 중심적 경향을 탈피한 다양한 학제들이 협동하여 조화로운 발전을 기하는 연계성의 과학이어야 한다. 장수과학은 바로 이러한 인간중심과학의 핵심으로서 장수고령사회를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로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기획 추진되어야 한다(박상철 2006).

V. “당당한 노화” 를 위한 실천 방안

1) 기본 방향

(1) 하여야 한다(Do It Program):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세 가지 행동 원칙

장수문화를 발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고령인 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함이 절대적인 요체이다. 고령자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움츠러 들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건강을 추구하도록 함은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충분조건이 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고령인 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프로그램이 반드시 고려해야할 점

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하여본다(박상철 2005).

첫째, 하고 싶다 (I will do) 원칙이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산발적으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프로그램들은 오로지 편의상, 또는 재정상의 이유로 특별한 고려 없이 제공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고령자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참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말 뿐임은 자명하다. 고령인세대의 취향에 맞는 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프로그램의 개발은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은 자명하며 지속적으로 영위될 것도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령인 층의 보수성을 감안하여 보다 전통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의식주프로그램과 운동 및 취미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소지가 크다.

둘째, 할 수 있다 (I can do) 원칙이다. 나이가 들어가면 우선 신체적 및 생리적으로 변화가 초래된다. 따라서 신체의 반사능이 저하됨은 물론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한 반응력도 크게 감소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시설에서의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대중매체나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일부 특수한 사람들의 면모를 강조함으로써 일반 고령자에게 부적절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예들이 있다(박상철 1997). 이러한 점에서 고령인 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고령인 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따라 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고령인 운동프로그램의 경우 유연성과 균형감을 증진시키면서 신체 각 부위에 고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고령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

셋째, 함께 하자 (Let's do) 원칙이다. 나이가 들어가면 외롭게 되기 마련이다. 함께 평생을 같이 했던 배우자도 떠나게 되고, 평생지기 친구들도 없어진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함께 함으로써 나눔을 향유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경쟁을 야기하여 적극성을 유도하고 건설적인 창의성을 높이고, 사회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점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에서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사안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하자(Do)” 원칙, 즉 “하고 싶다(I will do)” “할 수

있다(I can do)” 그리고 “함께 하자(Let's do)”의 원칙은 고령인들을 위하여 개발되거나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유념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령인 프로그램의 3 Do Principle(세 가지 하자 원칙) 이라고 한다.

(2) 주어야 한다(Give It Program): UN의 고령자 권리 장전 비판

세계적 현상인 인구의 고령화현상을 보다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UN에서는 2002년 마드리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우선순위 1로 노인 개발 중요성을 강조하여; 노인의 사회와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 / 노인과 노동력 / 농촌개발, 이주, 도시화 / 지식, 교육, 훈련에의 접근 / 세대 간 단결 / 빈곤퇴치 / 소득보장, 사회보장/보호와 빈곤의 예방 /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우선순위 2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화과정을 맞도록 하여; 노년의 건강 증진과 안녕 / 보건의료 서비스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 / 노인과 HIV/AIDS / 간병자와 의료 전문가 훈련 / 노인의 정신건강서비스 / 노인의 장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우선순위 3으로 노인을 위한 지원적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 주거환경과 주택 / 간호, 간병인 지지 / 소외, 학대와 폭력 / 노인의 이미지 개선들에 필요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UN은 이와 같은 마드리드 선언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급증해가는 고령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존하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각국에 촉구하는 선언을 하였다. 이 UN의 고령자 권리 장전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은 고령자에 대한 자기 개발 노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과 고령자가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과 주거 및 사회 환경 등의 생활지원 분위기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UN 고령자 권리 장전 선언은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 세계적인 노력을 하자는 선언적 의미는 있으나 본 선언문 내에는 고령자 측의 일방적인 복지만이 강조되어온 측면이 크다. 실제로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고려하면 고령자의 경우에도 일방적인 받는 기쁨, 즉 수혜의 혜택보다도 오히려

배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기쁨, 즉 공여자로서의 당당함이 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에서의 고령자의 사회 참여와 봉사가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의 고령자 권리 장전에는 이와 같은 고령자의 사회 참여와 봉사가 적극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누고 배풀어 줄 수 있는 여유는 사회 관계망을 강화하고 이웃과의 유대를 보다 공고하게 할 수 있다.

(3) 준비하여야 한다(Prepare It Program): 이상적 고령사회 프로젝트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의 건강, 재정, 능력의 준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의 준비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사회가 급속도로 고령사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초래되는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환경의 변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

고령사회를 1차적 고령사회와 2차적 고령사회로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도시화 현상으로 인하여 청장년층의 농촌지역사회 이탈, 도시 이입 현상으로 초래되는 간접적 고령사회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1차적 고령사회(primary aged society) 또는 직접 고령사회(direct aged society)는 지역주민들의 순수한 장수에 의하여 초래되는 능동적이고 진정한 고령사회를 의미하며, 반면 2차적 고령사회(secondary aged society) 또는 간접 고령사회(indirect aged society)는 청장년층의 지역사회 이탈로 인한 피동적 2차적 고령사회(passive secondary aged society)와 한편으로는 외부의 고령층인구가 새롭게 찾아들어 오면서 형성되는 능동적 2차적 고령사회(active secondary aged society)가 있다.(박상철 2003).

지역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1차적 고령사회로 발전되면 그 지역은 장수지역으로서 집중적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사회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고령화 현실은 2차적 피동적 고령사회로서의 특성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 그러한 지역은 사회적·산업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식구조 및 생활 패턴에까지 부정

적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보다 능동적인 노력을 통하여 고령인 들이 만년을 향유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찾아 들어오는 새로운 의미의 2차적 고령사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능동적 2차적 고령사회는 현실적으로 국내 수많은 농촌지역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패러다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피동적 2차적 고령사회를 새롭게 개혁하여 바람직한 미래 고령사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정책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안이다.

이상적 고령사회(Gerontopia)를 건립하기 위하여서는 각 지역사회는 지역 고령자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지역사회의 능동적·생산적·참여적 일꾼으로서 인생의 후반부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준비하여야 한다.

첫째는 안전보장(Safety Principle)이다. 그 지역이 건강 보전에 대한 위협요인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립하여야 한다. 고령인 사회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각종 장애와 질환 뿐 아니라, 응급상황에서 처치를 받을 수 있다는 보건상의 안전 뿐 아니라 전기·수도·통신·교통 등의 사회적 환경적 요건도 만족스럽게 보장되어야, 지역사회가 고령인 들의 삶을 향유 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될 수 있다.

둘째는 문화(Culture Principle)의 충족이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젊은이들 보다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각종 문화적 프로그램의 개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아울러 지역이 갖는 고유한 전통을 문화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대외적 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 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도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생산성(Productivity Principle) 시스템 개발이다. 고령층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생산시스템에 참여하여야 한다. 연령제한이라는 사회적 굴레를 벗어나 보다 주도적으로 사회참여 일꾼으로서의 삶을 위해서는 단순한 향유의 삶이 아니라 생산적 삶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령인 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재교육도 필요하거니와 지역사회의 각종 프로그램에 봉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고령인 개개인이 사회에 헌신

하고 아직도 필요한 존재로서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안전보장, 문화충족, 생산성 개발(Safety, Culture, Productivity)의 3대 요건은 각 지역사회를 SCP 지역사회(SCP Community) 또는 이상적 고령사회(Gerontopia)로 전환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필요한 전제조건이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가동할 필요가 있다.

2) 당당한 노화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

생물학적 노화연구를 통하여 노화 현상이 개체별로 매우 차별적이며 비가역적인 숙명적인 현상이 아니고 제어가 가능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과정에 접하게 되는 환경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생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생명체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노화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개체적인 노력과 사회문화적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체적 노력에서 중요한 점은 고령의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역량을 확대 발전하고 이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며, 사회적으로는 우선 기업은 근로자의 노후대책을 철저히 해주고 기업의 사회참여를 통한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계속하며 지역사회는 주민들이 연령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문화적 장치를 강구하고 지역생태 환경을 개선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입안하여 추구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과제: 개인적 노력이 중요하다

당당한 노후의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개개인 자신의 능력을 연령에 상관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아울러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식과 소양을 최대한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유럽에서 시작되어 널리 보급되고 있는 제3세대 대

학(The University of 3rd Age)과 같은 프로그램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사회 문화 학술 각각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가진 전문직 출신들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이웃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사회적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였다는 보람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수강생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역량을 배우고 닦음으로써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민간단체 주도로 시행될 수도 있으나 지역사회의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대학에는 정년퇴직한 명예교수들이 많이 있어 우수한 인력의 사회 참여 봉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노력에 대한 보수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순수한 봉사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3세대 대학은 고령자들에 의하여(by seniors) 고령자들을 위하여(for seniors) 고령자의(of seniors)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인의 측면에서는 사회 참여와 봉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이러한 각종 봉사를 하는 고령자에게는 금빛 리본 클럽 회원(Gold Ribbon Club Member)이라는 타이틀을 수여함으로써 봉사자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회원들 간에도 상호 친목을 도모하도록 한다.

(2) 지역사회의 과제: 고령자와 이웃과의 관계 증진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있어서 이미 가족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으로 강한 유대감은 사라질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실제로 초장수인들의 조사에서 독거노인의 경우 이웃관계가 전통적으로 돈독한 지역의 경우 노인들의 삶의 질이 이웃관계가 돈독하지 않은 지역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나 그러한 모델이 이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이와 같은 이웃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집중하도록 유

도하고 그러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지역사회들을 선정하여 서로 연대하여 더욱 발전하고 부족한 지역에 이러한 문화가 보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금빛지역사회 협의회(Golden Community Members Club)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측면에서는 고령자가 안전하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고령친화성 의식주 공간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시설을 갖추며 고령자의 대외관계를 증대하는 사이버 및 현실 공간을 확대 발전하여주는 노력을 극대화하는 지역사회들을 연계하여 고령친화지역협의회(Age-Friendly City Alliance)를 구성하여 상호 협조하고 지원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3) 기업의 과제: 고령자의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고령사회를 맞아 연령 제한 없이 직업 또는 사회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생존권이자 삶의 조건이기도 하다. 실제로 백세인과 같은 초장수인의 경우 대부분 다른 일반 노인들과 달리 70대 후반까지 생업에 종사한 경우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애 최대한 노동권 또는 사회봉사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기업과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측면에서는 구성원에게 연령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또한 고령자에게는 은퇴 후 사회 적응 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에 대한 기여를 다양한 방면에서 추구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아울러 자신의 기업이 스스로 장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가는 기업에게는 다이아몬드기업 협의회(Diamond Corporation Alliance)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기업들과 차별화하여 더욱 긍지와 소신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4) 국가의 과제:

A. SCP Community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

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에 상관없이 지역사회의 모든 일에 어떠한 굴레도 없이 참여하는 것은 미래지역사회의 이상적 패러다임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우리의 전통적 관습에 따라 일정한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생활, 활동 환경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일은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고령자들 스스로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지켜야 하며, 기업이나 지역사회도 이에 준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고령자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는 지역사회로 하여금 첫째 보건의료안전 시스템(Safety System)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둘째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프로그램(Culture Program)을 확대 발전하도록 지원하여 주어야 하며, 셋째 주민들이 어떠한 종류이든 생산적이고 사회공여적인 활동(Productivity Activity)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갖추어진 지역을 SCP Community로 지정하고 바로 Age-Friendly Community 또는 Age-Friendly City로 발전하도록,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사회의 프로그램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후원을 하여 주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단체들 간에 또는 국내외 여러 단체들 간에 연계망(SCP Community Network)을 형성하여 상호 협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 간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가 생산력 제고에도 영향력을 크게 미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이러한 시책은 종래 복지위주의 고령자에 대한 일방적 지원 방안을 탈피하여 고령자의 사회 참여와 봉사를 유도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B. 고령자의 삶과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과학기술 육성

인간중심 과학기술의 목표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볼 때, 근본이 되는 과학기술은 건강복지 과학기술, 생활환경 과학기술과 안전 과학기술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이 추구하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보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유지하고 지키는데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과 장수과학기술이 조화된 새로운 개념의 과학기술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장수고령사회를 대비한 과학 기술은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과학기술체계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고령사회 대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체계는 무엇보다도 인간중심 과학기술로서 건강, 안전, 환경을 위한 과학기술과 고령 인구화, 사회변천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의 개념이 융합되어 다음과 같은 고령사회를 위한 과학기술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박상철 2006).

첫째,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은 추진방향이 과학기술의 공급자 위주(Supplier-oriented)의 과학기술이 아니라, 소비자 위주(Consumer-oriented)의 과학기술로 바뀌어야 한다. 주 소비자가 고령인 층임을 감안할 때, 고령인 들의 일상생활, 삶의 질, 욕구, 심리상태, 건강상태 등에 적합한 과학기술로 발전하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둘째, 고령사회에 필요한 과학기술은 분류체계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해볼 수 있다. 즉, 보건의료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 for Safety), 문화충족을 위한 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 for Culture), 그리고 생산성증진을 위한 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 for Productivity)로 새롭게 분류해 볼 수 있다.

셋째, 과학기술의 추진방향으로 과학기술의 공공성과 개인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과학기술 발전의 경제성과 당위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고령사회의 일반 대부분 노인층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는 수요자의 부담능력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야만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 지원의 우선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목적으로 과학기술체계를 분류하고, 여러 가지 과학 기술 중 고령사회의 고령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과학 기술로 10대 우선과제를 제안해 본다. 즉 1.노화 시스템 연구, 2.세포가소성과 세포간의 관계성연구, 3.노화 형질전환 세포사멸연구, 4.노화와 면역연구, 5.노화와 이동성 연구, 6.노화와 감각기능 연구, 7.노화와 지능형 로봇 연구, 8.노화와 장기 보조기구연구, 9.노화 종적관찰 연구, 10. 수명과 초장수인 연구 등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모든 과학의 궁극적인 목표인 인류를 보다 더 오래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과학기술의 정점에 노화과학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화과학은 궁극적으로 NanoTechnology, Ecological Technology, Demographic Technology, Communication Technology, BioTechnology 등을 모두 종합한 인간을 위한 인간과학(HumanScience)의 결정체로서의 노화과학(Aging Technology)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화과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노화과학 입법안을 통과시키고, 노화과학 10개년 계획 또는 국민건강장수 10개년 플랜과 같은 종합대책을 세우고, 이를 위한 국립노화과학연구소를 건립하고 각 지역에는 지역사회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R&D를 위한 지역노화연구센터를 설립토록 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가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VI. 결 론

다가오는 고령사회의 사회적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급속적인 인구고령화이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고령인 스스로의 부정적 관점에서 비롯된다. 정책적으로는 고령자에 대한 수혜 복지 정책 위주로만 입안이 되고 있어, 고령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기본적으로 노화에 대하여 결정론적이고 운명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노화에 대한 개념의 오류를 지적하고 생물학적으로 노화란 비가역적이고 불가피한 숙명적인 과정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여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선택의 과정임을

새롭게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노화를 회복이 가능한 생물학적 현상임을 분명하게 하여 노화제어 방법으로 바꾸기 원칙(Replace principle)을 고치기 원칙(Restore principle)으로 전환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생물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고령사회를 바라보면서 개개인 노화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개선 운동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노화의 요인으로 생명체의 개체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생태 환경 문화 등의 제반 요건이 모두 상호작용함으로써 그 속도가 결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고령사회에서의 사회적 개선이 시급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개념은 당당한 노화의 개념이다. 당당한 노화(Confident Aging)는 다른 어떠한 조건보다도 고령자의 현재 모습에 보다 높은 가치의 무게를 주고 있다. 개체적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이웃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극대화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당당한 노화의 모습으로 고령사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노소 구별 없이, 남녀 차별 없이, 영역에 제한 없이 함께 어울려 내일을 향하여 살아가는 세상을 구축하고 기존의 효문화를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웃관계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고령사회를 맞아 급증하는 고령층인구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보다 능동적인 고령인상을 확립하고 이웃과의 관계망을 강화하며,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한 고령사회를 건설하며, 인간의 삶의 터전인 기업이나 지역사회가 구성원에 대한 제 3세대 대비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장수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과기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지원정책. 1996.
- 박상철 (1997) 노화종합프로젝트기획 및 노인건강교육프로그램개발. 보건복지부
- 박상철 (1998)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박상철 (2001), “장수과학과 장수문화” 『대한의사협회지』, 44(8), PP. 806~812.
- 박상철 (2002), 새로운 시대의 장수문화 정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 박상철 (2002) 한국의백세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상철 (2003) 장수시대의 건강하고 보람있는 삶. 아산사회복지재단 25권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박상철 (2004) 미래 고령사회 대비 국가과학 기술전략.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박상철, 이미숙, 이정재, 한경혜 (2005) 한국 장수인의 개체적 특성과 사회 환경적 요인 : 호남지방 장수벨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상철 (2005) SCP Community와 3 Do Principle: 고령사회를 위한 새로운 개념. 한국노화학회지,15(3),1-9
- 박상철 (2006),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추진 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Cho KA, Park SC (2005) Caveolin-1 as a prime modulator for aging: a new modality for phenotypic restoration? Mech. Age.Dev 126(1) 105-10
- Cho KA, Ryu SJ, Park JS, Jang IS, Ahn JS, Kim KT, Park SC (2003) Senescent phenotype can be reversed by reduction of caveolin status J, Biol. Chem. 278, 27789-98
- Choi SJ, Suh HK (1995) Aging in Korea; Today and Tomorrow. Fed. Kor. Gerontol. Soc.
- Falloefield, L(1990). The Quality of Life. p.20, Sorvenir Press
- National Institute of Health(1990) Quality of Life Assessment - Practice, Problems and Promise.

- Park SC (2002) Functional recovery of senescent cells through restoration of receptor-mediated endocytosis. *Mech. Aging Devel* 123(8). pp. 917~925
- Park SC (2006) New molecular target for modulation of aging process. *Antioxi.Redox Signal*. 8(3-4),620-7
- Park JS, Park WY, Cho KA, Kim DI, Jhun BH, Kim SR, Park SC (2001) Down-regulation of amphiphysin-1 is responsible for reduced receptor-mediated endocytosis in the senescent cells. *FASEB J*, 15, 1625-7
- Park WY, Park JS, Cho KA, Kim DI, Ko YG, Seo JS, Park SC (2000) Up-regulation of caveolin attenuates epidermal growth factor signaling in senescent cells. *J. Biol. Chem.* 275, 20847-52
- Strehler B(1982) *Time, Cells and Aging*. NY Acad.Press
- Suh Y, Lee LA, Kim WH, Han BG, Vijg J, Park SC. (2002) Aging alters the apoptotic response to genotoxic stress. *Nature Medicine* 8. 3~4.
- WHO. *The World Health report 1998-Life in the 21st Century. A Vision for All.*
- YEO EJ, Park SC (2002) Age dependent agonist-specific dysregulation of membrane-mediated signal transduction; emergence of the gate theory of aging. *Mech.Age.Dev.* 123, 1563-78
- Yeo EJ, Hwang YC, Kang CM, Choy H. Park.SC. (2002) Reduction of UV-induced cell death in the human senescent fibroblasts. *Mol Cells*. 10(4). 415~422

(본 원고는 본인이 발표한 서울복지재단 2주년 기념 특별강연 자료에서 발췌하였음)

◆ 제 1 주 제 ◆

제주지역 고령사회의 현황과 향후 대응전략

- ◆좌 장 : 한 삼 인(제주대학교 교수)
- ◆발 표 : 고 보 선(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 ◆토 론 : 전 영 록(제주관광대학 교수)
김 여 선(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복지과 과장)
강 정 숙(원광요양원 원장)
고 혜 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I.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0년 1.26명, 2001년 1.30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1.17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 세계 인구통계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평균 1.2명으로 대만, 폴란드,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등과 공동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인 나라로 기록되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50년 정도에는 2005년에 비해 1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05년에는 전국 35개 군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중 20.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60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 20.8%로 초고령 사회, 그리고 2050년에는 38.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06).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2005년 9.6%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8.5%에 비하여 1.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12.3%, 2015년 14.4%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제주지역은 약 10년 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24.3%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06). 제주지역의 고령화 속도는 전국의 타 시·도에 비하여 3년 이상 빠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80세 이상 차지하는 고령층 인구 구성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발전연구원, 2006). 한국은행 제주본부(2005)에서는 10년 후에 제주지역은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이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고령층의 노후생활은 더욱 어려울 것이고, 제주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저하될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동생산성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노동력 감소로 인한 국가의 성장잠재력 약화, 노인부양비 급증,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와 반대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가 등 국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켰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의 잠

재적 위험들을 사회적 위기현상 중 하나로 보고 정책개발 및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현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화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수립을 시작으로,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었으며, 2006년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인의 소득 및 고용보장, 건강보장,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적 서비스 확충 등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과 함께 노인복지재정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2006년 7월 1일부터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통하여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입소절차 시설기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이용절차 시설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이용절차 시설기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운영기준 등 노인복지조례를 추진 중에 있다. 2006년 12월에는 수놓음 정신으로 ‘제주형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을 수립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제시한 노인복지사업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차질 없는 준비, 장수의 섬에 부합된 노후안전 및 건강 생활권 보장,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조성사업 확대추진, 노후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추진, 경로우대 및 노인봉양 의식제도 사업 추진, 그리고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대비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도 노인복지사업으로 특수시책사업을 포함하여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조성사업(6개 사업), 노후생활안정 및 사회참여사업(6개 사업),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경로우대 및 노인봉양의식제도 지원(4개 사업), 노인의 안전 및 권리 증진사업(3개 사업), 노인수발보험제도 대비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2개 사업), 그리고 독거노인 One-Stop 서비스지원체계 구축사업 등에 대한 시행을 통하여 제주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 장수 지역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정책은

‘장수 이미지’를 브랜드화 하여 지역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노령친화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정책과 더불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의 빈곤과 질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 확충과 의료보장체계의 내실화, 노인교육프로그램의 확대,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 확대, 노인의료시설 확충 및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등 여러 해결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제주사회가 2015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본 논고에서는 고령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선진국의 대응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현재 제주의 고령화 현황과 더불어 제주노인의 성공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고령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1)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UN이 1982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비엔나에서 “제 1차 세계고령화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행동계획(Vienna Plan)’을 채택하였다. UN에서는 1991년부터 10월 1일을 ‘세계노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1년 UN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하였다. 이는 노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독립(independent),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그리고 존엄(dignity) 등의 5개 영역 18개 원칙으로 구성되었다.

이어 UN은 1999년을 다시 ‘세계 노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로 지정하여 ‘모든 연령층을 위한 사회를 향하여(Towards a society for all ages)’라는 기본 원칙하에 세대 간의 연대를 강조하였으며, 노인이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젊은 세대와 상

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통합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와 정책 등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UN은 '세계 노인의 해' 선포와 함께, 세계 노인인구가 평균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위기상황들을 지적하고 이러한 위기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모두 함께 국가 간, 분야 간 상호협조를 이루고,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매스미디어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동참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2002년 마드리드에서 “제 2차 세계고령화회의”를 개최하여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ing)’을 채택하였다. 이 행동계획은 1982년 베엔나에서 채택한 '국제행동계획(Vienna Plan)'을 일부 수정하여 건강과 영양, 소비자보호, 주택과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분야 등의 98개 권고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21세기의 고령화를 선진국의 문제를 넘어서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각 국가들의 노인의 삶의 질 유지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한편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공적 장기요양보호 체계의 도입, 개혁과 관련된 결정적 진보가 이루어졌다.

우선 체계의 보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일반 조세에 기반 하여 제한적인 장기요양보호를 제공하던 많은 국가들에서는 수급자격 결정에 부가되던 자산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체계 개편을 시도하였으며, 독일과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은 사회보험이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통해 체계개혁을 시도하였다.

또한 공적 장기요양보호 재정이 낮고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제한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던 한국, 헝가리, 멕시코 등에서도 공적 장기요양보호 체계의 대폭적인 확충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OECD, 2005).

즉 1990년대 이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노인 장기요양 보호 체계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개혁과 다양한 장기요양보호 구성 서비스의 연계를 통하여 요양보호의 연속망을 구축하기 위한 개혁, 소비자주의 강화를 위한 개혁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비

공식적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개혁이 수반되었다. 요양보호 이용자나 제공자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거나, 비공식적 요양보호 제공자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요양보호휴가제도, 가족이나 친척 중 요양보호 필요자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휴직제도, 세금혜택제도, 서비스 및 상담, 정보지원제도 등 비공식적 요양보호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김철주·홍성대, 2007).

2) 선진국의 대응 사례

(1) 프랑스

프랑스 노인복지정책은 장기적으로 소득보장, 생활양식, 고용 등 3개 영역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노인복지정책의 특징은 노인을 다른 시민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노인세대에 대한 믿음과 존중을 기초로 하여, 사회에서 노인을 격리시키기보다는 사회로의 통합을 꾀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인정책의 개발 및 입법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에게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대안 제시에서 막강한 권한이 보장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이 노인문제를 포함한 사회문제관련 분야 정책의 입안, 시행 및 개별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 2003).

(2) 스웨덴

세계 최초로 전 국민 공적연금을 실시한 스웨덴은 민영화를 향한 연금개혁으로 1998년 새로운 연금 법안을 시작하였다.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전통적인 복지국가모형과 칠레식 연금민영화의 중간 형태인 ‘제 3의 길’로 지칭되었다. 이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결합시킨 형태로, 퇴직 후에 일할 때 낸 만큼의 연금을 받게 된다는 점으로 은행의 저축과 유사하게 평생 동안의 기여 금액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금지급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박동석 외, 2003).

(3) 독일

2003년 3월 슈뢰더 총리가 제안한 ‘아젠다 2010’은 독일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노동시장, 산업, 조세, 환경, 이민, 교육, 행정 등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개혁을 포괄하는 실천전략이다. 즉,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민간 운영 연금제도의 비중을 높이도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며 정년연령도 기존의 남 63세, 여 60세에서 남녀 모두 65세로 연장하였다. 의료보험 개혁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를 줄이고 민간 의료보험의 역할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박동석 외, 2003).

(4) 일본

일본은 197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1973년 ‘복지원년’을 선포하였으며, 1982년 노인보건법 제정, 1989년 골드플랜 수립, 1994년 신 골드 플랜 수립, 1999년 골드 플랜 21 수립, 2000년 개호보험법 시행 등을 추진해 왔다.

1995년 제정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에서는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일생을 통하여 온전하고 충실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한 지침인 ‘고령사회대책의 대강에 관하여’에서는 기본적인 시책으로 고령자들을 위한 교통안전, 고용, 학습, 사회 참여, 소득확보, 건강, 의료서비스, 개호 서비스, 연금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 2003).

일본의 고령화 대응 정책은 크게 ‘고령자고용촉진제도’ ‘개호보험제도’ ‘공적연금제도’ 그리고 ‘자립지원 및 생활환경조성’ 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 고령화 대응 정책의 특징은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을 추진 하면서 동시에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인간답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개호 보험제도와 연금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1990년 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하여 재택복지와 시설의 일반화, 복지서비스 실시의 주체를 시·정·촌으로의 이관, 노인보건복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골드플랜과 신 골드 플랜으로 고령자보건복지의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Ⅲ. 제주의 인구고령화 현황

1) 우리나라 노령화 변화 추이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가 2000년 34.7%에서 2005년 47.4%, 2010년에는 66.8%로 예상되며, 노년부양비도 2005년 12.6%에서 2010년 14.9%, 2010년 21.8%, 2030년 37.3% 등으로 노년부양비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표 1. 참조).

한편 2005년도 제주지역 노년부양비는 14.5%로 6.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지만,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제주통계연보, 2005).

<표 1> 연도별 우리나라 노령화 변화 추이

구분(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20	2030
노년부양비(%)	5.7	6.1	7.4	8.3	10.1	12.6	14.9	21.8	37.3
노령화 지수	7.2	11.2	20.0	25.2	34.3	47.4	66.8	124.2	214.8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17.7	16.3	13.5	12.0	9.9	7.9	6.7	4.6	2.7

출처: 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주: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인구/15-64세 인구) X 100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

2) 연령별 노인 인구현황

노인인구의 연령별 구성비를 우리나라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노인인구 중 80세 이상 장수노인은 전국이 15.0%에 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18.7%로 노인인구 중 장수노인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전체 노인인구 55,795명 중 제주시 거주 노인은 36,449명이며, 서귀포시 거주 노인 19,346명이다. 전체 노인인구 중 여성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5.5%이며, 남성 노인은 34.5%로 여성 노인의 분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인구 중 전기 노령인구(65세-79세)는 45,358명으로 총 인구 대비 8.1%이며, 후기 노령인구(80세 이상)는 10,413명으로 총 인구 대비 1.9%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표 2-1> 노인인구의 연령별 구성비

구분		1975	1985	1990	1995	2000	2005
65-69세	우리나라	42.2	40.9	41.0	39.5	40.7	40.0
	제주특별자치도	34.4	31.0	34.4	33.2	38.9	36.9
70-74세	우리나라	27.5	29.1	27.3	28.9	27.2	28.2
	제주특별자치도	26.9	27.6	23.4	27.1	24.2	28.7
75-79세	우리나라	16.9	17.7	18.0	17.3	18.0	17.4
	제주특별자치도	20.9	20.2	20.0	17.1	18.2	15.7
80세 이상	우리나라	11.4	12.4	13.8	14.4	14.2	15.0
	제주특별자치도	17.8	21.2	22.2	22.6	18.7	18.7
계	우리나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주특별자치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각 년도 통계연보, 제주특별자치도.

<표 2-2> 연령별 노인인구현황 (2006. 6. 30 현재, 단위: 명)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65-69세	20,583	9,022	11,561	13,413	5,878	7,535	7,170	3,144	4,036
70-74세	15,999	5,918	10,071	10,222	3,848	6,374	5,767	2,070	3,697
75-79세	8,786	2,338	6,448	5,819	1,514	4,305	2,967	824	2,143
80-89세	8,817	1,768	7,049	5,878	1,151	4,727	2,939	617	2,322
90-99세	1,572	178	1,394	1,081	119	962	491	59	432
100세 이상	48	4	44	36	2	34	12	2	1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06).

3) 노인복지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현황

2006년 11월 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 관련시설 및 단체는

경로당을 포함하여 총 408개소가 있다. 이 중 양로원은 2개소, 요양원(무료, 유료)은 7개소, 실비요양원은 5개소, 노인일자리 관련시설은 1개소, 전문요양(무료, 실비) 시설은 8개소, 주·단기 보호시설은 8개소, 농어촌재가복지시설은 1개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10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표 3> 노인복지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현황 (2006. 11월 말 현재)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계
경로당	219	125	344
양로원	2	-	2
요양원(무료, 유료)	5	2	7
실비요양원	3	2	5
전문요양원	5	3	8
노인일자리 관련 시설	1	-	1
주·단기보호 시설	5	3	8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5	5	10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1	-	1
계	257	151	408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06).

4) 노인복지 예산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 2006년도 보건·복지예산 196,261,740천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총 예산 1,132,545,215천원의 17.3% 수준이다.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보건·복지예산은 1.4%의 증액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도 보건·복지예산 중에서 분야별 비중은 유아복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노인복지 예산으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2006년 노인복지 예산은 25,812백만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예산 866,308백만 원 중 약 2.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광역시를 기준으로 한 전국평균 2.7%와 비교하면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편, 2007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38,532백만 원으로, 여기에는 특별예산인 교통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2006년 예산과 비교하여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표 4-2. 참조).

<표 4-1> 보건·복지 예산현황

(2006. 6. 30 현재, 단위: 천원)

구분	2005년도	2006년	증·감
사회복지	47,771,459	13,057,260	-34,714,199
장애인복지	11,819,294	14,903,305	3,084,011
노인복지	16,753,288	25,812,029	9,058,741
여성교육문화	996,403	445,959	-550,444
여성복지	4,991,976	2,777,887	-2,214,089
유아복지	28,748,562	39,844,357	11,095,795
보건위생	9,976,944	11,416,033	1,439,089
특별회계	45,682,202	88,004,910	42,322,708
계	166,740,138	196,261,740	29,521,602
제주특별자치도 총예산	1,044,413,371	1,132,545,215	88,131,844
비율	15.9%	17.3%	1.4%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06).

<표 4-2>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사업내용	예산	기타
1.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조성 사업(6개 사업)	1,376	
2. 노후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사업(6개 사업)	5,734	
3.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1,512	
4. 경로우대 및 노인봉양의식제고 지원(4개 사업)	17,017	교통수당포함
5.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 사업(3개 사업)	804	
6. 노인수발보험대비 노인복지시설 인프라구축 (2개 사업)	11,601	
7. 독거노인 One-Stop 서비스지원체계 구축사업	488	
계	38,532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06).

IV. 제주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고령사회가 됨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변화로는 생산가능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소비와 저축, 투자를 위축시켜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실업문제가 발생하며, 고령층 인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재정 위기를 초래하며, 의료서비스 욕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노인부양의 사회적 부담 확대로 국가의 재정부담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조세부담 및 사회보장비 증가로 인한 세대 간 갈등, 노인복지서비스 및 시설의 확대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 요구, 농촌지역의 고령화률이 대도시 지역에 비하여 높은 고령화 현상의 지역적 편차 현상 등이 나타난다.

제주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주요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제주지역의 잠재성장률의 하락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감소는 2016년 이후에 제주지역의 잠재성장률을 급격히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은행 제주지역 본부, 2005). 따라서 노동인력의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여 제주지역경제의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의 노인부양의 한계와 저소득층 노인의 부양문제이다. 2005년도 제주지역의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 대비 15-64세 경제활동인구 비율)는 14.5%로 6.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제주통계연보,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노인들의 부양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노인부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부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제주발전연구원, 2006).

셋째, 독거노인의 증가와 빈곤노인의 증가 현상이다. 2005년 6월 말 현재 제주지역의 독거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전체 독거노인 12,888명 중 3,366명으로 26.1%이며, 저소득층 노인은 2,348명으로 18.2%를 차지하여 독거노인 44.3%가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은 재가 노인복지 시책을 제대로 수립하여 전문 재가 노인복지사에 의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차선책으로 단기·주간보호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06).

넷째, 제한적인 노인인력의 활용으로 인한 불안정한 노후생활이다. 제주지역에서도 취업을 원하는 노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일자리 유형들은 거의 임시직,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섯째, 2005년 말 제주지역 4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732명으로 전체 치매환자 수 4,630명의 1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치매노인들은 적절한 관리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에서 치매노인의 급증은 가족 간의 불화, 사회적 의료비용의 부담 증가, 치매환자의 안전 위협 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06).

여섯째,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이 거의 없으며,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노인의 참여가 저조하다. 제주지역의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화투 혹은 장기를 두면서 소일하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경로당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에 대한 관리소홀, 경로당 운영비의 부족,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및 시설의 부족 등으로 경로당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노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노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제주장수노인의 인적자원관리가 미흡하다. 제주장수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장수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장수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 장수영향 요인을 파악이 어려워 장수마을의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장수노인의 질적인 삶을 유지, 향상하는데 필요한 지원 및 관리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수지역의 장수이미지를 지역발전의 지역브랜드로 제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장수노인의 인적자원과 관련된 기초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V. 정책적 제언

제주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주요한 사회경제적 변화들을 중심으로 제주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소득보장 측면

우선,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으로는 노후의 빈곤을 예방하고 노후생활의 소득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공적연금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보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고용기간과 임금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져,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계층의 노후빈곤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수당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기존의 경로연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이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현재의 보험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미래의 노인빈곤층이 될 위험이 높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탈 빈곤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자활사업 프로그램과 직업 및 기술훈련 내용의 전환과 더불어 근로소득보전세제 등을 통하여 이들의 근로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제주노인의 빈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인이 속한 가구의 특성, 노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현재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 과거 노인의 직업력 등으로 구분하여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더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소득보호 및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주지역의 빈곤노인을 위한 긴급보호제도를 실행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

곤노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제주지역의 농촌노인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주로 농업에 종사해 왔으며, 현재에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노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농업을 통하여 자신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인이 직접 경험한 농업기술이나 노하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여 노인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에 필요한 경영 및 판로 확대 등은 이양하는 형태인 ‘농업경영이양 직접 지불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제주지역 노인들에게 적합한 특정사업을 발굴, 개발하여 노인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급식조례에 근거한 학교, 단체, 기관 등과 연계한 친환경생태농장 운영사업, 친환경농업관련 창업 및 경영지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제주지역의 8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경로 우대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장수의 섬, 장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노부모 동거가족에 대한 세제감면 등 지자체 차원의 간접적 지원정책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여 노인의 간접소득원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노인인력활용 측면

첫째, 제주지역의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해야 한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등 일자리에 대한 노인인력은행을 일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시니어 클럽을 보다 활성화시켜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한 노인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주노인의 취업실태 및 문제점, 노인인력시장의 현황과 전망, 노인취업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평가 등 노인취업과 관련된 기초 조사연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인력수급과 관련하여 노인인력시장에 대한 정책개발, 교육훈련, 취업, 조사, 및 평가를 전담하는 ‘노인인

력개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업 및 기술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노인고용관련 정보수집, 정보교류 및 평가 등 노인취업지원 one-stop 서비스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제주노인취업박람회가 노인인력의 구인 및 구직을 충족시키는 현실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노인고용에 따른 인센티브제공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넷째, 교육공무원 등 은퇴한 전문직 종사들에 대한 인력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소득유지 및 보장을 위하여 재취업의 근로형태와 더불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여 enjoy work하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다섯째, 노인의 인력활용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으로는 정년연장을 위한 법적 장치와 더불어,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개선의 형태로 임금피크제 추진, 시간제 취업, 유연적 고용 등을 고려한 계속고용제도 추진, 부분연금제 등을 통한 점진적 퇴직제도 추진 등을 고려하여 근로능력과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노인의 인적자원이 노동시장에서 장기적인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용주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의 현실화와 더불어 노인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고용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의료보호 및 서비스 측면

첫째, 제주지역에는 노인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어 신경통, 허리통증,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치매중세, 요실금, 우울증 등을 치료하고 있으나 공공 의료서비스 체제에 의한 공적지원을 확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재가복지서비스, 가정봉사과견사업, 유급·무급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노인,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지역사회 등이 상호네트워크가 구축된 one-stop 의료서비스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주도의 높은 독거노인 비율이 감안할 때, 이들의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가까운 의료기관과 연계한 hot-line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전문간호사의 인력을 확충하여 이들에 대한 질병관리, 건강검진, 재활 및 건강교육, 그리고 재가복지서비스 등의 정기적인 방문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치매노인 환자 수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선 치매 유병률 및 등록률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 보건기관의 치매 상담 기능의 확대하고, 기 설치된 주간보호소에 치매환자를 위한 보호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치매가족 자조그룹 결정 및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치매, 중풍 등 외상노인을 위한 주·단기보호시설 및 치매전문병원 및 치매주간보호센터, 간호요양원 등의 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도, 추자도 등 도서지역의 노인환자들에 대한 응급치료, 입원 및 수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제주장수마을 및 장수노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장수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수노인을 부양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확충해야 하며, 일본 등 장수 선진국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제주도의 장수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지역의 수려한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과 관련하여 고령친화 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양로 및 요양 산업 유치, 육성, 실버 스포츠, 건강 산업 유치,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섯째, 제주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사, 케어전문가 등 인적자원 점검 및 확충과 시설 인프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정부차원의 노력으로는 우선, 노인들은 건강보험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질병(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본인 부담액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에 앞서, 수급자격 판정기준 및 급여의 범위가 지나치게 보건의료관련 사항 중심이라는 점, 요양기관(특히, 재가요양 서비스 제공 기관) 인프라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확충 계획도 부족하다는 점, 본인 부담금이 과중하여 이용자 과 부담이 문제가 되어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기피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원칙적으로 가족구성원 제공 요양 서비스 보상을 위한 현금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케어관리를 전담할 케어매니저 양성 및 관리 방안이 부적하다는 점(김미숙, 2005) 등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 문제점들을 현실성 있게 검토하여 모든 노인들이 수발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4) 여가 및 사회활동 측면

첫째, 노인여가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노인여가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경로당 내의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도 차원에서 경로당 시스템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노인복합여가문화센터를 설립하여 노인여가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여가문화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모니터링 및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가 양성과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 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여가문화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노인이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들이 경험한 직업 활동 및 사회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정년 이후에 노인들에게 적합한 사회활동 참여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도 차원에서 노인의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양강좌 프로그램과 더불어 재취업을 원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욕구 파악을 통한 기술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사회 내에서 세대 간 활동 및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 에 대한 이해 및 노인에 대한 존경심 고양과 더불어 노인 스스로의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기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프로그램에 노인공경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거나, 노인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세대 간 상호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 축제 시 세대통합 프로그램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노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노인이 존경받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노인의 적극적인 여가 및 사회활동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으로는 노인 여가 문화적 수준을 근거로 한 노인의 삶의 질 척도를 지역별로 조사하여, 단순한 노인인구비례에 따른 여가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노인욕구에 부합한 맞춤형 노인여가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노인 여가문화 시설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노인인권보호 측면

첫째, 제주지역의 지역별 노인교통사고 실태 및 유형, 사고다발지역 등 노인안전실태를 파악하여 노인의 안전사고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안전을 위한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 교육, 캠페인이 확대되어야 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또한 필요하다.

둘째, 노인안전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노인보호지역 및 안전보도를 설치하여 노인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하다.

셋째, 도 차원에서 노인의 신체적 노화 및 신체조건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보수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주거에 대한 정보, 생활양식, 노인주거환경 등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가 실시되어야 하며, 노인의 생활양식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 학대 및 가족폭력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노인에 대한 지역 내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인 학대 및 가족폭력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노인 학대실태 파악 및 신고 접수, 상담 및 학대유형별 개입을 위한 프로그램 적극적인 지원, 상담서비스 활성화, 노인쉼터 서비스 등 요보호 시설 확충, 가해자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파악과 더불어 피해자 및 가해자를 위한 개입 프로그램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으로는 노인의 인간다운 삶과 성공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노인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문화보존에 힘써야 할 것이다.

VI. 결 론

지금까지 현재 제주의 고령화 현황을 살펴보고, 제주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주요한 사회경제적 변화들을 중심으로 제주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제주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의 바탕에는 크게 노인의 소득보호 및 보장을 통한 국민적 최저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지역 내 세대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고, 노인이 자신의 노화를 수용하고 성공적 노후를 위한 노인의 성장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을 더 이상 하위문화이론(subculture theory)으로 언급하는 신화(myths)에서 노인과 지역사회 모두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미숙(2005). 노인 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 분석. 노인복지연구. 27.
- 김철주·홍성대(2007). OECD국가 노인 장기요양보호 체계 개혁방향:
비공식적 장기 요양보호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제도화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5.
- 박동석·김대환·이연선(2003). 고령화쇼크. 서울: 굿인포메이션.
- 제주발전연구원(2005). 제주지역의 노인복지욕구수요조사.
- 제주발전연구원(2005). 제주장수마을의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
- 제주발전연구원(2006). 제주장수노인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 제주발전연구원(2006). 제주장수마을 선정 및 장수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품 개발 기초조사.
- 제주여성능력개발본부(2006). 제주지역노인의 노후생활실태와 정책과제.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각 년도.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각 년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각 년도.
- 제주특별자치도(200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각 년도.
- 한국법제연구원(2003). 고령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응 및 현황. 고령사회 법제워크숍 자료.
- 한국은행제주본부(2005). ‘제주지역 인구고령화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

◆ 제 2 주 제 ◆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

◆좌 장 : 박 상 수(제주관광대학 교수)

◆발 표 : 이 건 직(한림대학교 교수)

◆토 론 : 홍 성 직(제주의료원 원장)

권 인 택(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전략팀장)

정 영 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심 우 정(SERI 실버산업전문가포럼
부회장)

I. 서론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나이는 30대 초반이나 40년 뒤에는 50대가 평균 나이가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연령이 10년에 5세씩 늙어지고 있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고령화의 위협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가 인구의 상당수가 건강위험, 재무위험 및 생활위험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는 생존의 문제로 정부의 책임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공익적 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에는 그 한계가 있다. 또한 소비자도 질 낮고 총량이 부족한 공익 서비스에 강한 불만을 갖게 된다. 따라서 경제력이 있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다 질 좋고 충분한 양의 서비스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다른 하나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져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기가 제조업 공동화 및 경제의 서비스화, 지식정보화, 세계화와 함께 분배에 대한 요구가 용솨음친다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의 진통까지 맞물리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강한 고용보호제도 등에 의한 고용 없는 성장, 내수·수출산업간 성장률 격차로 인한 경기양극화, 경공업·중화학 공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산업양극화, 중소기업·대기업간의 기업양극화와 IMF이후 더욱 심해진 빈부 양극화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 경제성장 기반이 잠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령화가 불거지고 있다. 단기적인 경제 대응책 마련 속에 그 다음에 다가올 더 큰 위협을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분명 위협적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 급팽창하는 노인인구의 신규 거대수요를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처방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실버산업이라는 ‘고령친화’ 산업이 그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던 베이비붐세대의 소비력을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산업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 진입시점에서 갖는 함의는 문제점을 보다 분명히 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즉, 우리나라는 중진국으로는 드물

게 고령화 사회 진입하여 고령화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¹⁾ 이를 공공측면에서 보면 선진국에 비해 재정, 복지제도 및 인식 모두 미흡하여 고령화 충격 흡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장측면에서는 고령소비자 수는 충족되었으나 그 질은 불확실하여 수요기반 파악에 신중함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

즉,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기초로 한 민간 중심의 ‘고령친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높다 하겠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익적 서비스의 질적 양적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력이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다 질 좋은 서비스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신산업 기반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로 대변되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의 마련은 국가 재정악화를 완화하고 복지국가에 근간을 확대하는 최적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의 목적은 2005년 대통령 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써 2005년 2월에 종료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연구’에 이어 고령친화성이 높은 산업의 추가 발굴을 목적으로 2006년 2월에 발간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Ⅱ)’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함에 있다. 2005년의 1차 연구에서는 요양, 의료 및 복지기기, 정보, 여가 및 문화, 금융, 주택, 한방 및 농업 등 총 8대 산업부문을 포함하였으며, 2006년의 2차 연구에서는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류 및 교육 등 6대 산업을 추가하여 총 14대 고령친화산업을 발굴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그 특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및 발전가능성을 특히, 시장규모와 고용창출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고령친화산업 전반의 활성화 비전, 방향, 목표 및 전략을 설정한 후 마지막으로 고령친화산업의 전략품목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소개하고자 한다.

1) 참고로 고령화 사회 진입시점에서의 1인당 국민소득 순위가 일본의 경우 1970년대 6위의 상황이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에 22위의 순위로 진입하였음.

II.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환경

1) 인구 통계적 측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고령화의 특성은 크게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다는 점이다.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2000년)에서 고령사회(2018년) 및 초고령사회(2026년)에 진입하는 시점이 각각 18년과 8년이 소요되어 지금까지 가장 빠르게 진행했다하는 일본의 경우보다 더 급속하다는 점이다.²⁾ 이는 첫째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을 때문이다. 2005년도 합계출산율이 1.08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이는 동년 OECD 평균치인 1.6 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해외 대비 급격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 대비 2002년까지 증가된 평균수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18년으로 이는 일본 11년, 프랑스 8년, 미국 6년 등에 비해 월등히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2001년 현재 평균수명은 76.5세(남자 72.8세, 여자 80.0세)로 1981년 66.2세, 1991년 71.7세 보다 각각 10.4세, 4.8세 증가하였다. 한편, 각종 질병 및 사고사에 의한 사망원인이 제거될 경우 남자는 11.0년, 여자는 6.5년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으며, 유전자 기술을 포함한 생명공학의 발전에 뒤따를 경우 평균수명은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0~1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화 지수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여 엄청난 사회적 부담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노년화 지수는 2000년 34.3%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약 4배, 2040년 약 10배, 2060년 약 15배, 2080년 약 1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 가능인구(15세~64세)는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비(노령인구/생산 가능인구)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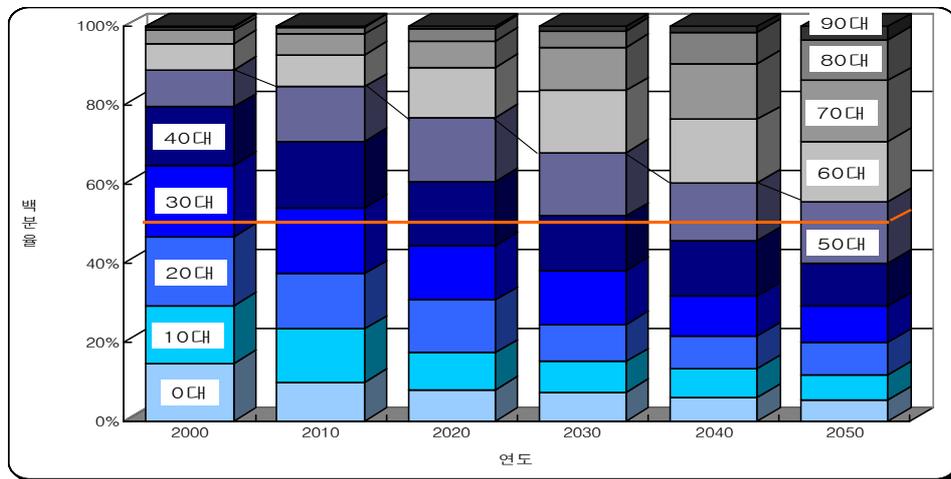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총인구의 71.7%(3,370만 명)에서 2050년 55.1%(2,443만 명)로 감소하며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도 2000년 10.1%에서 2050년 62.5%로 6배나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일본의 경우, 각각 24년, 12년 소요

이에 따라 2002년 현재 생산 가능인구 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에서 2026년 생산 가능인구 3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로 급변하게 되어 생산가능자의 부담이 3배 이상 급증하게 될 것이다.

<그림 1>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전인구의 평균연령이 10년마다 5년씩 연로해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 현재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31세이나, 2020년에는 43세, 2040년에는 53세로 10년마다 평균 5세씩 많아짐을 볼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을 실감 있게 엿보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림 1> 연도별 연령대별 인구구조 변화



2) 사회 문화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먼저 노인인구의 성비 및 유배우율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950년대에는 약 18년에 불과하였던 노인만의 생활기간(빈둥우리 시기, TONK(Two Only, No Kids)족)이 급대하여 1990년대 이후는 약 32년이나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950년대에는 약 9년에 불과하였던 배우자 사별 후 혼자 생활하는 기간이 1990년대 이후는 약 12년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주로 여성 노인들만이 남아 있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는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 단면으로 전체가구대비 노인가구의 구성비가 2000년 현재 8.9%이나 2020년에는 16.8%로 급격한 핵가족화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계층의 팽창으로 인해 다양한

육구들이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등, 새로운 노년계층에 의한 새로운 노년문화가 급속히 형성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 노인자원봉사 등 세대 간 연대의식의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 기제가 제공되어야 하며,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극복과 세대간 공동체를 통한 다양한 교육, 활동들이 제공되어야 하며 나아가 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 문제도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등의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부양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자립적·독립적 노인세대가 급증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3) 경제적 측면

(1) 재정부담의 증가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년부양비 증가, 저축감소, 투자위축 등으로 향후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지난 10년('92~'02)간 경제성장률이 5.6%였으나, 향후 10년('03~'12)간에는 4.4~4.6%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화가 심화되는 2020년에는 3.1%, 2050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될 전망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율(수급자/가입자)이 급증하고, 연금 수급불균형구조(저부담-고급여)로 인해 연금재정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쉽게 접해 볼 수 있다. 2002년에 4.5%이었던 국민연금수급율도 2010년에 13.3%, 2030년에 41.9%, 2050년에는 88.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으로 성장둔화,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세입기반은 취약한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1990년에 0.14%에서 2002년 0.36%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연금, 조기퇴직, 보건 의료 및 장기요양 등 고령화에 의한 정부재정지출은 2000년 GDP의 3.1% 수준에서 2050년 11.6%로 8.5%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OECD평균 21.2%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나 그 증가폭에 있어서는 OECD의 평균 5.8%포인트 증가에 비해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재

정 압박의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소비패턴의 변화

그러나 노인소비자 시장의 절대크기 증가와 함께 노령연금 수령자 증가로 인한 노인구매력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0년 현재 50세 이상 노인소비자 시장 크기는 전체시장대비 20.4%에서 2010년 28.7%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6.25 전쟁 후 1955년에서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816만 명(전체 인구의 16.8%)의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게 되는 2008년부터 본격적인 실버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데 1990년대 중반 미국의 경우, 50대 이상의 장노령 계층이 전체 개인재산액의 3/4, 금융자산의 77%, 여유소득의 1/2, 총 소비의 40%, 1인당 소비액이 전체 평균의 2.5배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그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

또한 2001년 약 60만 명이던 노령연금 수령자가 2005년 109만 명, 2010년에는 183만 명에 이르고, 2018년에는 약 800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적으로 200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약 3억 명으로 2020년에는 거의 두 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령소비자 시장이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중고령 이상 세대의 소득기회 및 소득금액은 향후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고령자들은 자녀교육비 지출, 주택대출금 상환 등의 부담이 큰 50대까지는 평균소비성향이 줄어들지만 60대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4년 2/4분기 도시가계조사(통계청)를 보면 노인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113으로 전체 가구 평균소비성향인 79를 상회하고 있다.

Ⅲ. 고령친화산업 정의 및 활성화 필요성

1) 정의 및 특징

(1)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대상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고령친화’라 함은 실제로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도 편리하다’는 취지하에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한 노인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령자³⁾라 함은 현재의 고령자는 물론 노후를 대비하는 미래의 고령자도 포함하고자 하며 따라서 현재의 중장년층이 향후 고령층으로 편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소비 및 투자하는 제품과 서비스도 고령친화산업 범주에 포함된다 하겠다.

고령친화산업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산업 분류방식과는 달리 소비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재분류된 산업인 관계로 상품 그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지 않음이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 및 공급자를 나누어 살펴봄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수요자는 현재의 고령자(65세 이상)뿐 아니라 베이비 붐 세대로 대표되는 장래 고령자도 포함되며 특히, 고령자의 간병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인, 주수발자 및 도우미를 위한 소비 및 투자 제품과 서비스도 본 산업에 포함된다.

고령친화산업의 공급자는 매우 다양한데 크게 생물학적 노화와 관련된 상품을 생산하는 보건 및 요양, 의료기기, 복지용품, 식품, 의약품, 한방, 장묘 등의 산업과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와 관련된 상품을 생산하는 금융, 문화 및 여가, 전자 및 정보, 주택, 교육, 교통, 농업, 의류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2) 고령친화산업의 특성

3)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상 65세 이상 노쇠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인구통계국에서는 55~64세(the olders), 65~74세(the elders), 75~84세(the aged), 85세 이상(the very old)으로 분류하고 55세 이상을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있음. 본 사업에서의 노인은 경제적 활동의 은퇴시점인 60세를 기준으로 분류함.

가. 산업적 특성

고령친화산업은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써 국제경쟁력 및 시장매력도 등 수익성 외에 진일보한 복지국가차원에서의 공공성 제고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즉, 신체적·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의 안전과 권익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관심이 특히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기존 산업과 다른 큰 특성이 있다 하겠다. 고령친화산업은 기존 산업에서와 같이 현 수준보다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을 소비하는 성격과 달리 저하된 각종 능력을 저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산업이라 하겠다. 특히, 이들이 신체적, 사회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보호 책무가 있으며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은 수급의 관계가 수익자 부담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원리를 따른다는 측면에서 노인복지와 차별화되거나 노인의 생존권과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고령친화산업은 시장 기능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는 노인복지제도와 다를 뿐 궁극적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맥을 같이 한다 하겠다. 따라서 특히 공적부조대상자들에게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식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도 크다 하겠다.

이상의 노인복지와의 차별적 특성 외에 고령친화산업은 다음과 같은 고유의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큰 시장 규모로 형성될 산업이지만 그 세부 내용은 다양하고 변화에 민감한 ‘세분화된 소형 시장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소품종 대량생산’에 적합한 대기업에 비해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중소기업에 적합형 산업으로 내수확산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기획위원회내 경제양극화 대책수립을 위한 TFT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가 높다 하겠다. 이러한 특징은 산업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성’보다 ‘범위의 경제성 및

연결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하는 관계로 자원의 공동 활용에 기초한 산업클러스터 형태가 보다 효과적이며 이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나. 소지바로서의 특성

기업의 입장에서 고령친화산업의 태동과 급속한 성장기를 맞아 최대 수요층인 실버마켓, 이른바 베이비붐세대의 특성을 살펴봄이 대단히 중요하다.

첫 번째로 고령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은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는 '첨단제품' 보다 기능적으로 단순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적합제품' 이 보다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 노령화 과정에서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변화를 총체적으로 경험하며 실제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저항으로 인해 소비되지 않을 수 있는 특성도 갖고 있다. 즉, 노인은 스스로를 평균 15세 정도 더 젊다고 인지하고 있으므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제품을 선호할 확률이 높다 하겠다.

세 번째로 고령친화 서비스산업의 경우 대상 소비주체가 이동성이 적고 한정된 지역에 거주하며 지속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지역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지역밀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요계층이 지역적으로 확산되어 있어 고객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도시지역 위주의 사업 전개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 고령자는 수요하기를 원하는 서비스가 융합되어 한 번에 제공됨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복지+주거+기기+여가, 금융+여가+의료+주거+한방 서비스 등이 편리하게 one-stop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의 융합화를 통한 클러스터링으로 대고객만족도를 제고해야 산업경쟁력이 강화된다.

다섯 번째로 여성의 평균수명 증가로 독신여성노인 중심의 재화 및 서비스 개발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 2002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평균수명이 80세로 남성보다 7년이 더 길다. 또한 노인 단독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독신여성노인 중심의 재화 및 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제품과 서비스 개발 시 국가적·문화적 특성이 반영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으로도 볼 수 있다.

다. 베이비 부 세대의 특성

향후 등장할 실버세대는 1953년~1965년 사이에 태어난 전후 및 산업화의 베이비 붐 세대로 이전 세대와 질적, 양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소비의 적극적 주체자로 은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에 있어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이비 붐 세대는 50년간 인구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유일한 연령군단으로 ‘단일 최대 소비 주도층’으로 1천만 명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데 첫 번째 노후대비 세대이다.

이들은 산업적 측면에서 주택, 자동차, 영화산업의 성장을 이끈 세대이며 이들이 은퇴하는 시점에서 이끌게 될 산업이 고령친화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들은 일정수준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데 2000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베이붐 세대의 교육연수는 평균 약 12년으로 50세 이상 세대(약 8년)에 비해 4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적소득보장정책 등이 더해져 이전 세대에 비해 상당 수준의 구매력을 갖추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고령자가 민간전체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대에 이르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도 20~30%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는 80년대 민주화를 직접 경험한 세대로 높은 사회참여의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서구적 가치관이 확산되어 자신을 위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1~2명의 소 자녀를 두고 있으며 부를 축적하고 주택을 소유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 건강의료, 교육, 상거래 등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의 이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능력을 갖추고도 있다.

2) 활성화 필요성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는 예측된 5대 위험, 즉 정부측면에서 재정위험 및 저성장위험이며 고령층 측면에서 건강위험, 재무위험 및 생활위험을 대응하

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및 저성장 위험을 감소하여 건전 재정운동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인하며, 고령층의 건강, 재무 및 생활 위험을 감소시켜 건강하고 성공적이며 활동적인 고령화를 실현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제공하는 공익적 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력이 있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다 질 좋은 서비스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그림 2 참조). 고령친화산업이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활성화 될 경우 정부 재정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고령친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충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고령친화 상품은 복지서비스를 위해 사용될 것이며 생산된 상품은 또 다시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창출하고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정부 재정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아울러 시장기능을 살려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 시킬 경우 고령자의 삶의 질은 보다 확대 강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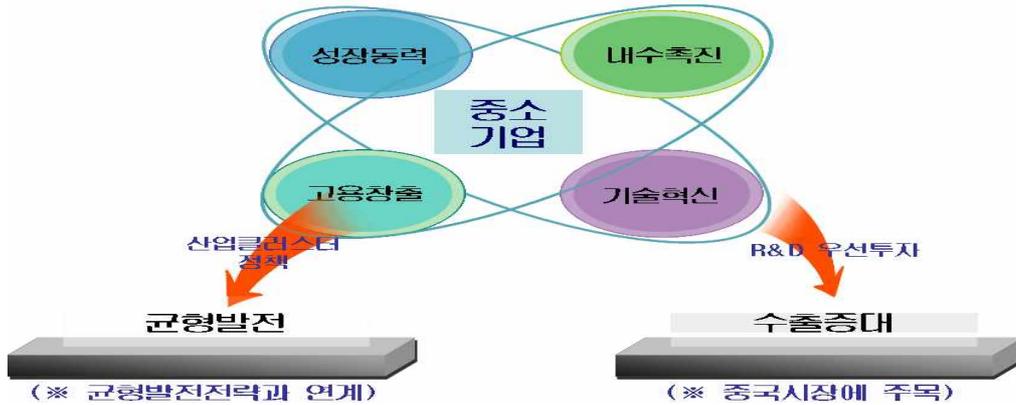
<그림 2> 고령친화산업과 노인복지제도의 선순환 구조



이와 함께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의 실천적 방안을 제공하게 되며 ‘지역균형발전계획’, ‘중소기업 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그림 3. 참조). 즉, 중소기업에 보다 적합한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는 내수촉진과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기술혁신과 성장 동력화로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조기 활성화된 고령친화산업은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여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고령화 시대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IV.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비전 및 전략

1) 활성화 비전 및 전략

<그림 4>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향, 목표 그리고 비전을 나타내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는 첫째,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로는 시장성장을 및 시장점유율 등으로 구성되는 시장 매력도를 제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의 목표는 첫째, 정부의 재정 및 저성장 위험을 해결할 차세대 성장 동력화와 둘째, 고령세대의 건강·재무·생활 위험 해결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제고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외부환경과 내부역량을 고려한 활성화 전략의 단계적 추진, 둘째로는 전략품목의 발굴과 이를 중심으로 지원정책 전개하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추진, 셋째는 제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안전기준 마련, 고령소비자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과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한 관련법 제·개정 및 마지

막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중소기업청 등 관련 국정과제 추진위원회 및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

이처럼 3대 방향 하에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을 추진할 경우 ‘실버를 골드로’ 라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4〉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비전, 목표 및 전략



2) 활성화 시기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는 시점은 크게 수요 및 공급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수요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5대 조건을 만족하는 2008년경에 본격적으로 개화되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은 여러모로 고령 친화 산업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해가 될 전망이다. 2008년은 베이비붐세대가 은퇴(53세)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동시에 고령자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 국민 연금제도의 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뿐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도 2만 불을 넘어 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의 태동은 고령인구가 10%를 넘어서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선 시점으로 미국은 1970년대 말부터, 일본은 198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본격적 활황세는 소득수준이 2만 달러를 넘어선 시점으로 미국은 1980년대, 일본은 1990년대로 나타나고 있다.

V. 고령화친화산업⁴⁾ 경제적 파급 효과 및 전략품목

1) 고령친화산업의 경제적 효과

(1) 시장규모

2002년 현재 14대 고령친화산업의 매출액기준 시장규모는 약 12.8조원이며 이는 모태산업대비 2.2%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서 모태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서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자, 예비고령자 및 주수발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저하로 인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보았기에 그 수요에 제한이 없는 근간이 되는 산업을 지칭하였다(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고령친화산업은 오는 2010년이 되며 시장규모가 약 43.9조원, 모태산업의 4.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약 148.6조원의 시장규모로 모태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0.0%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였다. 모태산업의 경우 2002년의 시장규모는 2010년 및 2020년까지 각각 연평균 5.87%와 5.2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동기간 고령친화산업은 각각 16.64%와 14.58%씩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 고용창출력

전 산업 취업유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고령친화산업의 연간 고용창출력이 <표 1>에 나타나 있다. 전 산업 취업유발효과는 각 부문에서 10억 원을 생산하는 것이 연관효과를 통해 전체 산업에서 유발하는 취업자 수를 말한다.

4)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2005 참조

〈표 1〉 모태산업 및 고령친화산업의 연간고용창출 효과

(단위: 만명, %)

구 분	2002년	2010년		2020년	
	취업자수	취업자수	'02~'10 연평균 증가율	취업자수	'10~'20 연평균 증가율
모 태 산 업	1,266	990	△3.0	715	△3.2
고 령 친 화 산 업	23	45	8.6	69	4.3

고령친화산업의 모태산업의 경우 2002년도 연간고용창출효과는 약 1,266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오는 2010년 및 2020년에는 기술변화 및 업종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한 취업계수의 추세적 하락으로 각각 약 990만 명과 약 715만 명으로 이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3.0%씩,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2%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반해 고령친화산업의 연간고용창출은 2002년 현재 약 23만 명에서 2010년에 약 45만 명, 2020년에 약 69만 명으로 각각 연평균 8.6%와 4.3%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고용창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는 실업난 해소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분석되었다.

2) 고령친화산업의 전략품목

고령친화산업의 전략품목의 도출 기준은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국제경쟁력, 시장매력도 및 공공성 등을 우선 선정기준으로 8대 부문 공히 적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문별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세분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고령친화산업 자체가 새로이 분류된 측면도 있고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은 특성 등으로 인해 관련 자료를 취득함에는 현실적 문제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자료 분석 방법보다 업체,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공급자 델파이조사 및 수요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부문별 전략품목 선정 하였다.

특히, 공공 정책측면에서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 및 대통령 자문위원회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법제도 등 행정적 문제점 등에 관해 상호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쳤다. 또한 민간측면에서 노인 단체 및 관련 기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차의 설명회를 통해 수요 파악 및 공급 능력

등 시장 여건에 관해 조사를 하였다.

이상의 전략품목 선정 기준을 토대로 14대 부문에 걸쳐 총 105개의 유망품목을 도출하고 평가하여 34개의 고령친화 전략품목을 선정하였다(표 2. 참조).

<표 2> 고령친화 34개 전략품목

부문	전략 품목
요양	재가요양서비스
기기	재택/원격진단진료및휴대형다기능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및실내외이동지원시스템
정보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개발
여가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	역모기지연금, 자산관리서비스
주택	고령자용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
한방	한방보건관광, 항노화한방기능성식품, 노인용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한약제제개발
농업	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은퇴농장
교통	저상버스, 고령자 감응 첨단신호기, 형광표지판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신경계용약, 순환계용약, 대사성 의약품
장묘	화장 및 납골용품, 웰엔딩준비 및 체험교실, 개장 및 이장서비스
의류	건강보조 스마트웨어, 건강개선용 레저스포츠웨어, 체형보정용 이너웨어
교육	일자리 교육 및 훈련

VI.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복지인프라와 관련된 정부 재정이 빈약한 국가가 초고속으로 고령사회로 향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즉, 고령친화산업은 민간을 통해 정부의 책임에 해당하는 국민(특히, 고령자)의 건강권 및 생존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접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는 산업지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1월 제57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정책지원을 천명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산하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를

설치하고 ‘고령친화산업팀’을 신설함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지속적 지원 정책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세부 계획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을 국회 상정하여 법적 기틀도 마련하고 있으며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의 마련, 고령자 관련 제품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R&D 투자 확대 및 세제 지원, 산·학·연·관 공동연구기반 마련,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 및 지원, 성공사례의 개발 및 확산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류, 교육 등 보다 다양한 고령친화산업을 추가 발굴하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로드맵도 마련하여 시장에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진국도 이미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신 시장 창출 및 지원 강화, 관련된 기술 인프라 정비와 확충, 전문 인력육성, 표준화 개발 및 적절한 규제, 성공사례(best practice) 확산을 골자로 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개발에 정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 종합 토론 ◆

21세기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방안 모색

- ◆좌 장 : 고 부 언(제주발전연구원 원장)
- ◆토 론 : 현 애 자(국회의원)
 - 이 경 희(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임 기 옥(제주노인복지연구소장)
 - 김 선 희(제주특별자치 노인학대
예방센터 소장)
 - 남 진 열(제주대학교 교수)